

정책연구 2008-03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물가대책의 평가와 과제

박 승 록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물가대책의 평가와 과제

1판1쇄 인쇄/2008년 5월 6일

1판1쇄 발행/2008년 5월 13일

발행처 · 한국경제연구원

발행인 · 김종석

편집인 · 김종석

등록번호 · 제318-1982-000003호

(150-75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8-1 전경련회관
전화(대표)3771-0001 (직통)3771-0057 팩시밀리 785-0270~1
<http://www.keri.org/>

© 한국경제연구원, 2008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3771-0057

목 차

<요 약>	7
I. 서 론	15
II.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물가관리의 타당성	17
1. 분배문제의 개선	17
2. 산업경쟁력 강화의 계기	17
3. 실천가능 정책대안 존재	17
4. 소수의 관리가능 품목	18
III. 서민생활 안정과 물가관리대상 품목	20
1. 생활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품목	20
2. 환율변화에 민감한 품목, 최종소비비중이 높은 품목	26
3. 원유가격 변화에 민감한 품목	30
4. 밀·옥수수 가격변화에 민감한 품목	34
IV. 정부의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물가대책의 평가	40
1. 주요 내용	40
2. 서민생활물가 52개 품목의 가격변화	42
3. 평가	45
V. 물가안정을 위한 대책	59
1. 관리대상 품목의 축소	59
2. 거시정책과의 조화	59

3. 탄력적 조세운용	60
4. 교육비 상승 억제	60
5. 유통과정 개선	60
6. 상품경쟁력 강화 차원의 접근	61
7. 해외자원의 활용	61
참고문헌	63

표 목 차

<표 1> 가계소득계층별 소비지출 비중(2003년)	2
<표 2> 가계소득계층별 소비지출 비중(2007년)	2
<표 3> 생활물가지수 구성품목의 기여도 및 기여율(2007년 3월~2008년 3월) ...	25
<표 4> 환율 10% 절하에 따른 부문별 물가과급효과와 그 순위 및 민간소비비중(상위 50개 품목)	28
<표 5> 원유가격 10% 인상에 따른 부문별 물가과급효과와 그 순위 및 민간소비비중(상위 50개 품목)	32
<표 6> 밀 수입가격 10% 인상에 따른 부문별 물가과급효과와 그 순위 및 민간소비비중(상위 50개 품목)	36
<표 7> 옥수수 가격 10% 인상에 따른 부문별 물가과급효과와 그 순위 및 민간소비비중(상위 50개 품목)	38
<표 8> 서민생활물가 구성품목의 전년동기 대비 물가상승률 및 기여율 ...	4
<표 9> 서민생활물가 구성품목에 대한 환율, 원유, 밀·옥수수 국제가격변화의 국내물가 과급효과	49
<표 10> 소비자물가, 생활물가(주거비 포함), 생활물가, 서민생활물가(주거비 포 함), 서민생활물가의 추세와 전년동월 대비 증가율	52
<표 11> 소비자물가, 생활물가(주거비 포함), 생활물가, 서민생활물가(주거비 포함), 서민생활물가 원계열 간, 전년동월 대비 증가율 간 상관계수	54

그림목차

<그림 1> 수입물가상승 상위 주요 품목의 수입물가 추이 (1991년 1월~2008년 2월)	16
<그림 2> 생활물가상승 기여율 상위 품목의 누적기여율(2007년 3월~2008년 3월)	19
<그림 3> 가계소득계층별 소비지출 비중(2007년)	22
<그림 4> 소득 최하위(1분위)와 최상위(5분위) 소득배율(2003~2007년)	23
<그림 5> 소득 10분위 자료를 이용한 연도별 로렌츠 곡선의 변화(2003~2007년)	23
<그림 6> 생활물가상승 기여도 상위 30대 품목과 기여도 (2007년 3월~2008년 3월)	26
<그림 7> 대미달러 환율 추이	27
<그림 8> 환율 10% 절하에 따른 부문별 물가과급효과(상위 30대 품목)	28
<그림 9> 원유 수입가격지수 추이(달러 기준)	31
<그림 10> 원유가격 10% 인상에 따른 부문별 물가과급효과(상위 30개 품목)	31
<그림 11> 밀 수입가격 10% 인상에 따른 부문별 물가과급효과 (상위 30대 품목)	35
<그림 12> 옥수수 가격 10% 인상에 따른 부문별 물가과급효과 (상위 30대 품목)	38
<그림 13> 서민생활물가 구성품목의 물가지수 추세(1991년 1월~2008년 3월)	42
<그림 14> 소비자물가, 생활물가(주거비 포함), 생활물가, 서민생활물가(주거비 포함), 서민생활물가의 추세	51
<그림 15> 서민생활물가지수와 전년동월 대비 증가율 추이 (1995년 1월~2008년 3월)	55
<그림 16> 물가변화의 요인별 분해결과 추정치(1990~2005년)	57

<요 약>

1. 서민물가 안정대책의 마련

- 최근(2008. 3. 25) 기획재정부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생활필수품 점검 및 대응계획’을 마련한 바 있음.
 - 이는 국제 원유가의 상승, 환율절하, 밀·옥수수 등 곡물가격 상승에 따라 서민생활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 저소득계층의 구입빈도가 높고, 소비지출 비중이 높은 52개 품목을 선정하여 이를 집중 관리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 정부는 물가상승의 직접적 원인이 원가상승에 있는 경우 정부가 직접 가격규제는 하지 않도록 하되, 할당관세 적용, 유통구조 개선, 시장경쟁 촉진을 통해 가격 안정기반을 마련할 것이며 불필요한 시장개입은 자제하겠다는 입장임.

2. 서민물가 안정대책의 문제점

- 하지만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물가대책은 몇 가지 측면에서 지나친 시장개입으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할 여지가 있음.

가. 관리대상 품목의 과다

- 물가관리를 위해 저소득계층의 구입빈도가 높고, 소비지출 비중이 높은 52개 품목을 선정하였으나 소비자물가 작성 품목 기준으로는 실제 72개 내외의 품목이 관리대상이 되고 있음.
- 또한 생활물가를 구성하는 품목의 물가상승에 대한 기여도(율)를 보면 일

부품목의 물가상승이 생활물가(또는 서민물가)지수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 가령 서민생활물가를 크게 증가시키는 품목은 휘발유, 경유, 납입금, 주거비로서 누적 기여율이 무려 50%를 상회하고 있으며,
- 여기에 도시가스, LPG, 보육시설 이용료, 시내버스료, 배추를 포함하면 서민생활물가의 80%를 상승시키고 있음.

□ 따라서 지나친 시장개입을 자제하겠다는 정부의 물가관리 의지의 측면에서 본다면 너무 많은 품목이 실제 관리대상이 되고 있거나, 관리되고 있다는 오해를 받고 있음.

나. 과도한 시장개입의 위험

□ 정부는 직접적 가격규제보다는 가격안정기반의 구축에 전념하며 불필요한 시장개입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임.

- 하지만 10일 주기로 가격동향을 집중 모니터링하며, 매월 1일 소비자물가지수 발표 후 서민생활 안정 T/F를 통해 52개 품목의 가격동향을 집중 점검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해당업계에는 실제로 “가격통제의 위협”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함.
- 만약 정부의지가 시장개입을 하지 않을 입장이라면 구태여 집중적 가격동향 모니터링 등으로 오해를 살 필요가 없을 것임.

□ 따라서 불필요한 시장왜곡을 가능한 한 방지한다는 차원에서는 관심대상 품목을 생활물가상승에 대한 기여도(율)가 높은 유류, 교육비, 주거비 등 최소품목으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다. 예상되는 정책적 부작용

□ 거시정책과의 부조화

-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품목별 물가관리라는 미시정책과 금리, 통화, 재정 정책과 같은 거시정책이 상호보완적으로 추진될 필요성이 있음.
- 하지만 정책집행기관의 효율적 공조체제 구축이 힘들고, 성장우선 정책으로 인한 재정책대의 유인이 존재하므로 정책실패 가능성을 조심해야 할 것임.

□ 일자리 창출기회 감소로 인한 서민생활 불안

- 만약 물가안정을 지나치게 강조한다면 성장이 억제되어 일자리 창출기회가 감소할 것이며, 이는 오히려 서민생활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할 가능성이 있음.

□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양극화 심화

- 유통과정의 최종단계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실제 물가관리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지나친 물가관리는 관련 중소기업의 수익성을 하락시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할 가능성이 있음.

□ 실질적인 규제로 작용하여 다른 부작용 발생

- 실제 원유, 밀·옥수수 가격 상승으로 인한 원가상승요인을 관련 업계가 가격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경우, 업계의 수익성 악화에 따른 다른 회피수단의 시도 등으로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것임.

3. 서민물가 안정을 위한 대책

- 따라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물가대책은 관리대상 품목의 축소, 거시정책과의 조화, 탄력적 조세운용, 교육비 인상의 완화, 유통구조의 개선 등을 통

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임.

- 여기에 경쟁력 강화 차원의 접근, 해외원자재의 안정적 확보가 이루어진다면 물가안정과 더불어 경제성장을 동시에 달성하는 데 일조할 것임.

가. 시장원리에 대한 믿음과 존중

- 실제 서민생활물가를 크게 증가시키는 품목은 유류(휘발유, 경유 등), 납입금, 주거비, 교통비이므로 이들 일부품목의 물가관리에 최소한의 개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를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유류에 대한 관세인하, 유통구조 개선, 시장경쟁 촉진 등 간접적 물가관리정책을 더욱 강조할 필요가 있음.

나. 거시정책과의 조화

- 정부재정지출, 통화량 확대를 통한 인위적 경제성장 정책은 원유, 원자재, 곡물 수입가격 상승에 따른 국내물가상승을 더욱 가중할 위험이 있음.
- 아울러 물가상승 억제를 위한 성장정책의 지나친 완화는 성장둔화에 따른 일자리 창출기회를 축소하여 서민생활이 더욱 악화될 여지가 있음.
- 따라서 물가관리와 경제성장을 조화롭게 할 수 있는 정책믹스(policy mix)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관련 정책당국의 협조가 필요함.

다. 탄력적 유류세 운용

- 원유, 곡물 수입가의 상승이라는 통제하기 힘든 외부요인에 의해 생활물가상승이 초래되었다는 점에서는 물가안정을 위한 획기적 대안은 매우 제한적임.
- 따라서 외부요인에 의한 물가상승요인을 가격통제를 통해 생산자에게만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시장경제원리에도 부합하지 않음.

- 따라서 휘발유, 경유 등 유류품목에서는 정부의 탄력적인 유류세 운용을 통해 조세수입의 감소를 감내할 필요가 있음. 이는 정부의 물가안정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이 될 수 있고 시장개입을 최소화하는 수단이 될 것임.
- 정부 역시 물가안정을 위해 밀·옥수수 등 가공용·사료용 원료로 사용되는 물품에 대한 무관세화, 휘발유 등 석유제품에 대한 할당관세(3%) 인하를 추진하고 있으나 물가안정 효과는 크지 않을 것임.
- 따라서 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탄력성 운용을 통한 유류가격의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라. 교육비 상승 억제

- 현재 서민생활을 어렵게 하는 물가상승요인 가운데에는 환율절하, 원유가, 곡물가격의 상승과 관련성이 적은 집세, 교육비 상승으로 인한 서민생활 물가상승이 현저함.
- 지난 1년간 납입금 상승률은 휘발유, 경유 다음으로 서민생활물가를 상승시킨 요인으로 작용했는데, 특히 대학등록금 상승이 납입금 상승의 커다란 원인이 되고 있음.
- 대학등록금 상승은 지난 1년간의 추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2000년대에 들어와서 지속적으로 생활(또는 서민)물가상승에 크게 영향을 준 요인으로 작용하였음.
- 따라서 사립대학에 대한 지원강화,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적극적 방안이 필요함.

마. 상품경쟁력 강화 차원의 접근

- 생산원가 절감, 기술혁신을 통한 비용증가요인의 극복은 업계에서 최선의 물가대책이 될 것임.

- 과거 한국 제조업의 경우 수입원자재의 가격변화에 비교적 활발한 생산성 증가를 통해 대응해 온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바. 해외자원의 활용

- 안정적 에너지 확보를 위해 해외자원 개발을 통한 자주개발률을 크게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식량, 에너지는 안보적 차원에서 정부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원유, 원자재, 전략품목, 농업부문 등에서 적극적인 M&A를 통한 전략적 원자재 확보가 필요함.
- 정부의 넘치는 외환보유고를 국부펀드로 운영하거나 각종 연기금을 활용하여 해외 원자재의 확보를 위한 노력을 전략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물가대책의 평가와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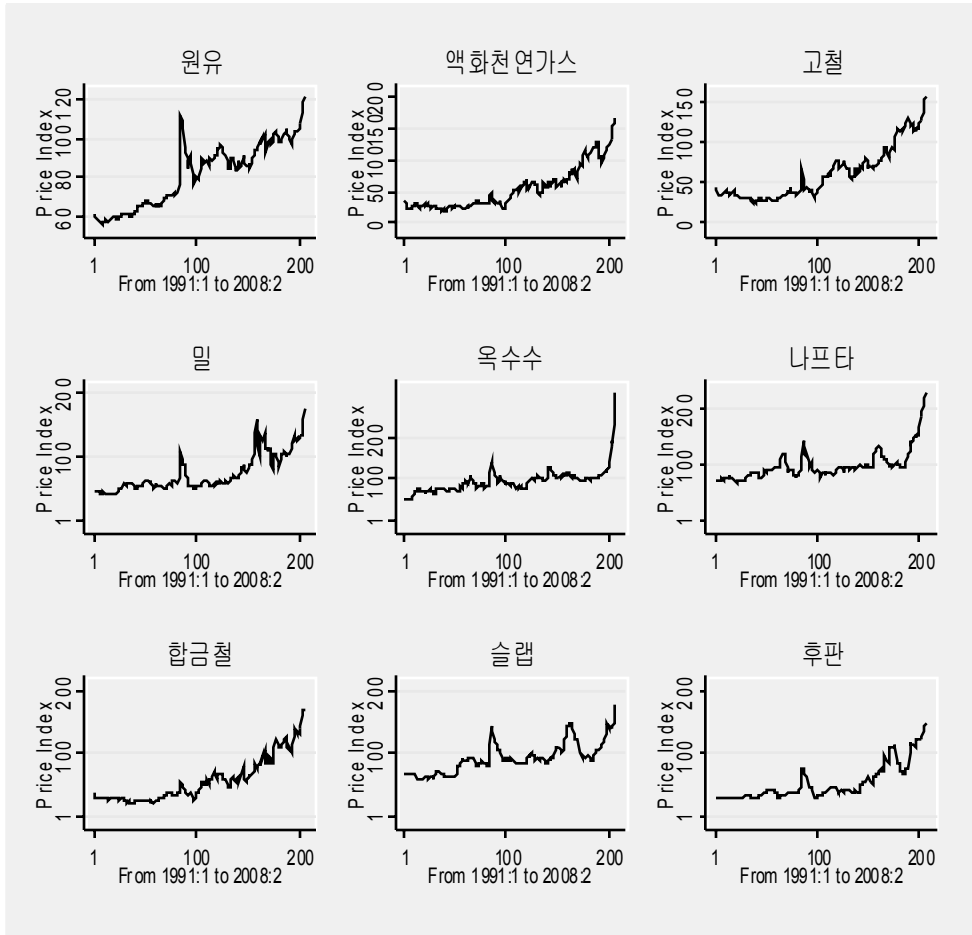
- I. 서론
- II.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물가관리의 타당성
- III. 서민생활 안정과 물가관리대상 품목
- IV. 정부의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물가대책의 평가
- V. 물가안정을 위한 대책

I. 서론

- 정부는 최근 서민생활과 직결된 “생활필수품 52개”를 선정하여 물가상승을 집중 관리키로 했으며, 물가상승을 막기 위해 교통요금, 수도요금 등 공공요금을 동결하기로 함.
 - 이는 대통령이 ‘경제상황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물가급등을 우려하여 50개의 생필품의 가격안정을 위한 구체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에 따른 것임.
- 서민생활 안정과 안정적 경제성장을 위해 물가안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해도 정부의 해당 품목의 가격에 대한 직접개입은 단기적인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시장경제의 기본원칙에 벗어나 장기적으로는 부작용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물가안정을 위한 바람직한 방법은 간접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방법으로서 거시정책적 측면에서 통화량 조정, 미시정책적 측면에서 시장경쟁의 유도, 유통구조의 개선, 수입품 통관절차의 개선, 규제완화, 물류비의 경감, 생산성 향상수준에서의 임금인상, 기업의 혁신노력을 통한 기술진보가 근본적 대책이 될 것임.
- 하지만 외부적 요인(국제 원유가격, 곡물가격 등 원자재 가격 상승)에 의해 물가가 급등하여 기업의 생산활동이나 일반 소비자, 특히 서민의 생활이 위협받을 경우 미세조정 차원에서 물가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조치는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이런 점에 착안하여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물가관리의 타당성, 품목선정에 있어서 다양한 기준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 금년 3월에 발표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정책적 관심이 될 기획재정부의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생활필수품 점검 및 대응계획’을 평가하고 물가안정을 위한 더욱 바람직한 방안을 살펴볼 것임.

<그림 1> 수입물가상승 상위 주요 품목의 수입물가 추이

(1991년 1월~2008년 2월)



자료: 통계청(www.kosis.kr), 수출입물가지수(품목별)

II.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물가관리의 타당성

1. 분배문제의 개선

- 서민생활에 필수적인 생필품의 가격상승에 의해 서민생활이 어려워지고, 궁극적으로 소득계층별 분배문제가 악화된다면, 그리고 정책당국이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가치와 목표가 정해질 경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위성이 있음.
- 소득계층별 분배문제의 개선은 시장경제원리에 의해 해결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물가상승에 대한 최소한의 개입을 통해 물가안정과 분배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경우 이는 더욱 바람직하고 실용적인 정책운용 방안이 될 수 있음.

2. 산업경쟁력 강화의 계기

- 생활물가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원자재의 가격상승이 정부의 인위적 시장 개입이 아니라 업계의 비용절감노력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이는 궁극적으로 상품경쟁력 또는 산업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음.
- 따라서 물가상승을 초래한 각종 요인을 식별하고, 생산, 유통, 소비단계에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 시장환경의 개선 또는 업계의 자구노력을 유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음.

3. 실천가능 정책대안 존재

- 원유가 상승, 환율상승에 물가가 민감하게 변화하는 품목은 휘발유, 경유 등으로 생활물가상승에 큰 역할을 하고 있으나, 이들 가격에는 상당한 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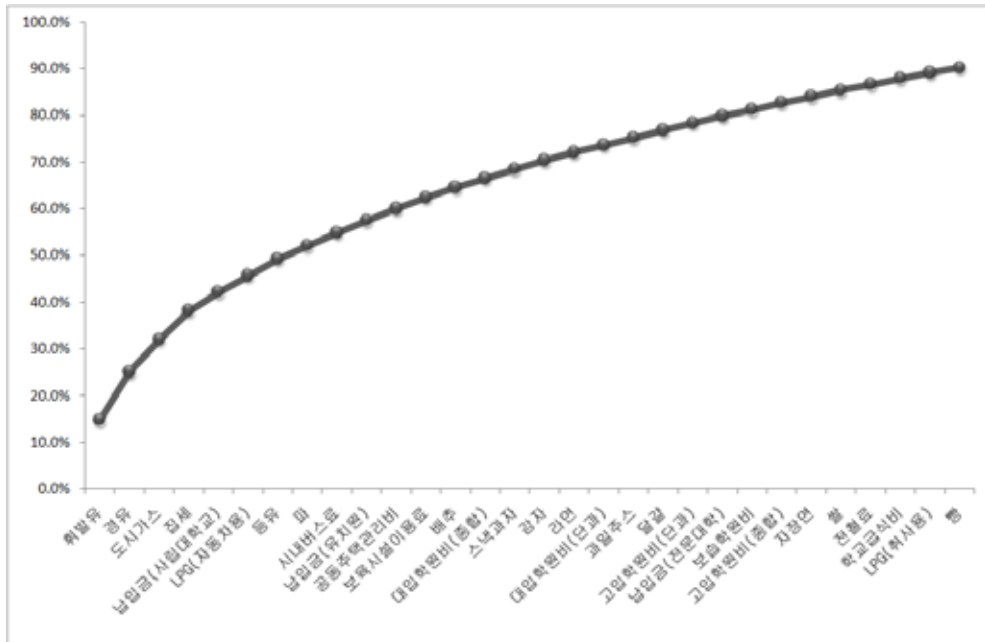
세와 세금(60% 내외)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탄력적인 세율조정을 통해 시장개입으로 인한 비효율 발생의 부담 없이 일시적인 물가폭등을 조정할 수 있음.

- 현대경제연구원의 조사(2008. 3. 17), “휘발유 가격 안정, 교통세 인하로 충분한가”에 의하면, 현재 휘발유와 경유의 법정 세율(교통·에너지·환경세)은 각각 630원과 454원이고, LPG부탄의 법정 세율(개별소비세)은 360원임. 그러나 정부는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탄력세율을 적용해 실제로 휘발유, 경유에는 각각 505원, 358원의 교통에너지환경세를, LPG부탄에는 개별소비세 275원을 부과하고 있음.
- 또한 동 연구에 의하면, 2007년 4분기(10~12월) 기준으로 유류세 중 교통에너지환경세를 12.7% 내렸을 때 국내 휘발유 값은 리터당 평균 1319.18원으로 OECD 회원국인 일본(1,076원) 캐나다(753원) 호주(856원) 미국(586원)의 휘발유 가격보다 높은 수준이므로 유류세 인하는 물가안정을 위한 매우 유용한 정책대안이 될 수 있음.

4. 소수의 관리가능 품목

-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검토되고 있는 관리대상 품목은 52개(실제 72개)이지만 이들 품목의 물가상승에 대한 기여도를 보면 실제 관리대상 품목수는 매우 축소될 수 있음.
 - 현재 생활물가상승에 대한 품목별 기여율을 통해 살펴보면 실제 30여 개 품목의 가격상승이 생활물가를 상당부분 결정하고 있으며, 50개 품목의 물가상승이 생활물가상승에 90% 이상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따라서 실제 물가안정을 위해 관리해야 할 품목이나 시장개입이 불가피한 품목수는 훨씬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시장개입을 최소화하면서 물가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음.

<그림 2> 생활물가상승 기여율 상위 품목의 누적기여율
(2007년 3월~2008년 3월)



자료: 통계청(www.kosis.kr), 수출입물가지수(품목별)

Ⅲ. 서민생활 안정과 물가관리대상 품목

- 물가상승으로 인해 서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품목들은 다양한 기준에 의해 판단할 수 있을 것임.
- 서민들의 전체 소비지출에서 소비비중이 큰 품목이 우선 고려대상이 될 수 있음.
 - 하지만 물가급등 시 갑작스럽게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점에서 본다면 외부요인에 의해 물가가 급등할 가능성이 있는 품목들 가운데 서민들의 소비비중이 높은 품목을 선정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함.
- 본 단원에서는 이런 점에 착안하여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관리대상 품목이 될 수 있는 선정 기준, 이미 선정된 서민생활 관련 52개 품목의 외부환경변화에 대한 영향력을 평가하고자 함.

1. 생활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품목

(1) 서민생활과 관련된 소득계층별 소비지출 비중 추이

- 우선 서민생활과 관련하여 소득계층별 소비지출에서의 차이, 서민생활 안정과 관련해서 어떤 지출항목의 관리가 필요할 것인지 살펴보고자 함.
- 가계소득계층별 소비지출 비중을 보면 저소득층일수록 고소득층에 비해 식료품, 주거비, 광열·수도비 등 생활과 관련된 지출에 대한 비중이 높고 그 차이가 현저하게 큼.
 - 2007년 기준, 소득계층 5분위별 소비지출항목별 지출비중을 보면, 하위 1분위 소득계층의 소비지출 비중은 26.3%로서 상위 5분위 소득계층의 17.1%에 비해 현저히 높음.
 - 주거비 지출비중을 보면 하위 1분위 소득계층의 지출 비중은 5.0%로서 상위 5분위 소득계층의 2.0%에 비해 현저히 높음.

- 광열·수도비 지출비중을 보면 하위 1분위 소득계층의 지출비중은 6.9%로서 상위 5분위 소득계층의 2.8%에 비해 현저히 높음.
 - 따라서 식료품, 주거비, 광열·수도비와 관련된 품목의 가격이 상승할 때에는 고소득층보다 저소득 서민층의 생활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지므로 이들 분야에 있어서 물가관리가 필요할 수 있음.
- 2003년과 2007년의 소득계층별 소비지출 비중의 연도별 추이를 보면, 거의 전 소득계층에서 기초생활과 관련된 식료품, 주거비, 광열·수도의 지출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표 1> 가계소득계층별 소비지출 비중(200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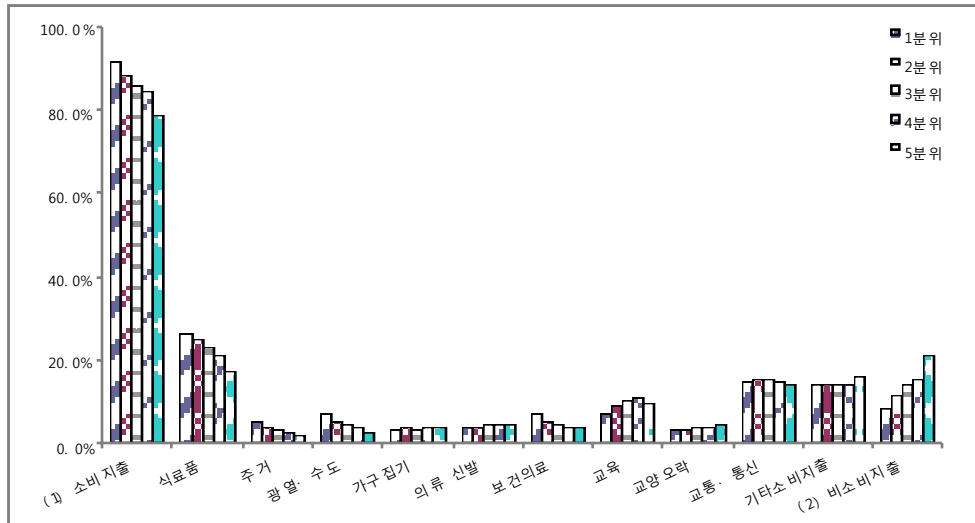
구 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평균
(1) 소비지출	91.2%	89.5%	88.0%	86.2%	82.6%	86.3%
식료품	27.2%	26.1%	24.4%	23.2%	19.3%	23.0%
주거	5.1%	3.5%	3.0%	2.5%	2.2%	2.9%
광열·수도	6.7%	5.4%	4.7%	4.1%	3.2%	4.3%
가구집기가사용품	2.9%	3.1%	3.1%	3.2%	3.7%	3.3%
의류 및 신발	3.8%	4.3%	4.6%	5.0%	5.1%	4.7%
보건의료	6.1%	4.3%	4.2%	3.9%	3.5%	4.1%
교육	7.1%	9.0%	10.4%	10.4%	9.9%	9.7%
교양오락	3.5%	3.8%	3.9%	4.1%	4.6%	4.1%
교통·통신	14.8%	15.5%	15.4%	15.1%	14.4%	14.9%
기타소비지출	13.8%	14.5%	14.4%	14.9%	16.8%	15.3%
(2) 비소비지출	8.8%	10.5%	12.0%	13.8%	17.4%	13.7%

<표 2> 가계소득계층별 소비지출 비중(2007년)

구 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평균
(1) 소비지출	91.5%	88.7%	86.1%	84.5%	78.9%	84.1%
식료품	26.3%	24.7%	23.0%	21.5%	17.1%	21.1%
주거	5.0%	3.5%	3.0%	2.8%	2.0%	2.9%
광열·수도	6.9%	5.3%	4.5%	3.9%	2.8%	4.1%
가구집기가사용품	3.4%	3.6%	3.5%	3.7%	4.0%	3.7%
의류 및 신발	3.6%	4.0%	4.3%	4.6%	4.6%	4.4%
보건의료	7.2%	5.1%	4.5%	4.1%	3.8%	4.5%
교육	7.1%	9.2%	10.1%	11.0%	9.7%	9.7%
교양오락	3.3%	3.5%	3.7%	4.1%	4.8%	4.1%
교통·통신	14.6%	15.5%	15.7%	14.6%	13.8%	14.7%
기타소비지출	14.3%	14.3%	13.8%	14.3%	16.3%	14.9%
(2) 비소비지출	8.5%	11.3%	13.9%	15.5%	21.1%	1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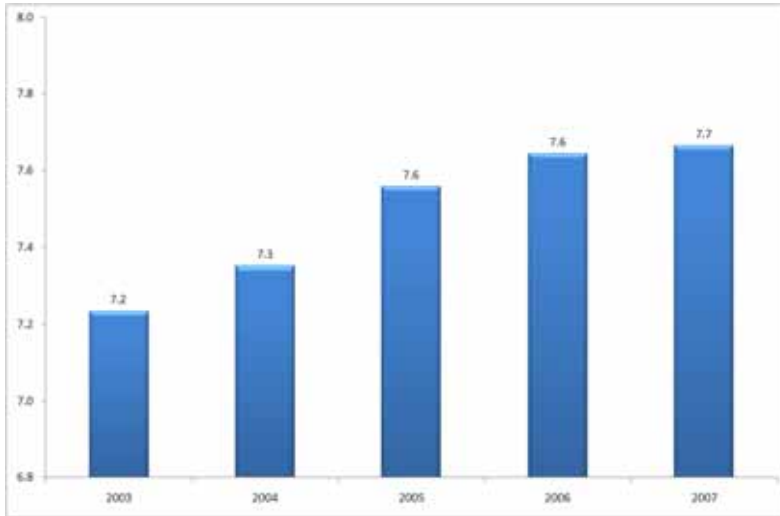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www.kosis.kr), 소득 5분위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2인 이상)

<그림 3> 가계소득계층별 소비지출 비중(200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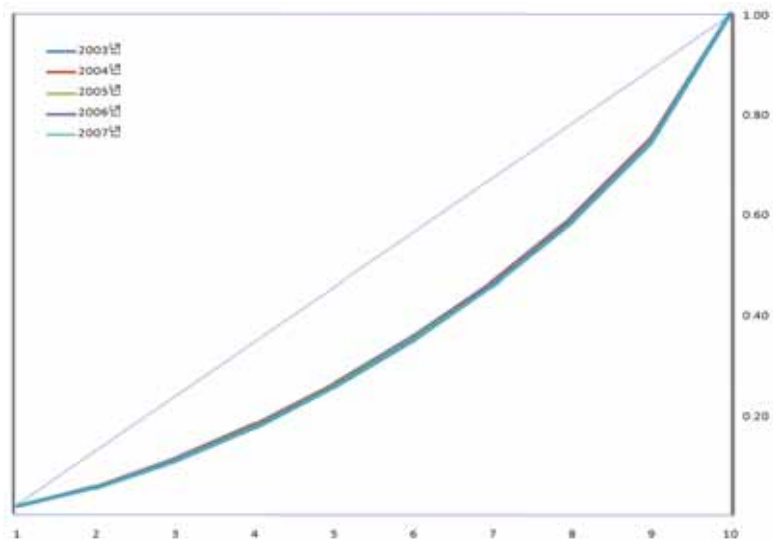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www.kosis.kr), 소득 5분위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2인 이상)

<그림 4> 소득 최하위(1분위)와 최상위(5분위) 소득배율(2003~2007년)



자료: 통계청(www.kosis.kr), 소득 5분위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2인 이상)

<그림 5> 소득 10분위 자료를 이용한 연도별 로렌츠 곡선의 변화 (2003~2007년)



자료: 통계청(www.kosis.kr), 소득 10분위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2인 이상)

- 다만 소득계층별 소득수준에 있어서 최하층(1분위) 월평균소득에 대한 최상층(5분위)의 소득배율은 <그림 4>에서 보듯이 2003년 이후 점차 커지면서 2003년 7.2배에서 2007년 7.7배로 확대되고 있음.
- 그림에도 불구하고 소득의 불균등 정도를 나타내는 로렌츠 곡선(10분위 소득수준별 소득자료 활용)을 통해 볼 때 소득분배의 심각한 악화현상은 관찰되지 않고 있음(<그림 5> 참조).

(2) 생활물가지수에 큰 영향을 미치는 품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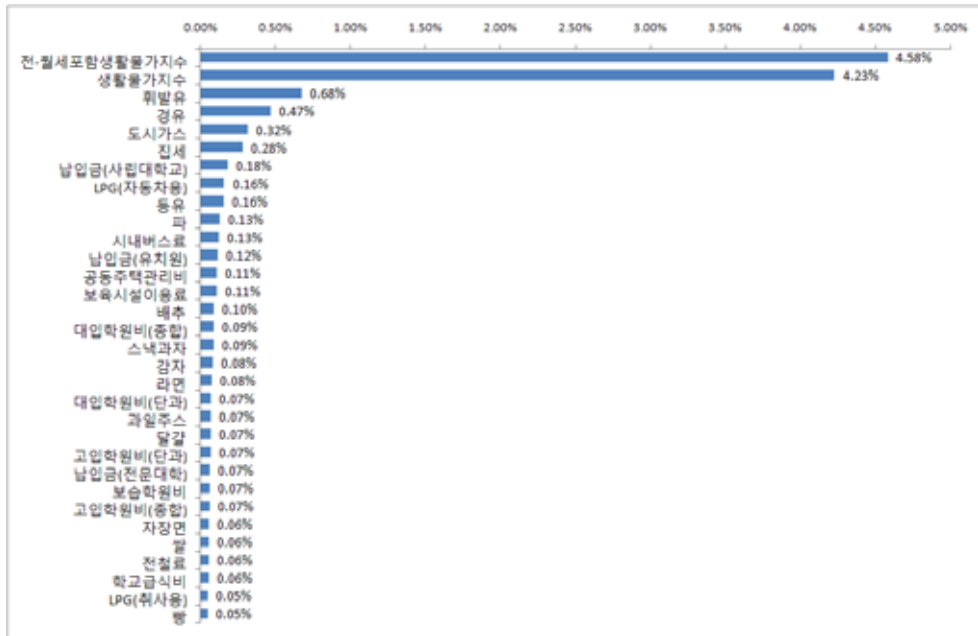
- 정부는 소비자물가지수 외에도 국민의 생활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품목을 선정해서 “생활물가지수”라는 공식통계를 발표하고 있음.
- 최하위 품목 수준에서 소비자물가지수는 약 489개 품목을, 생활물가지수는 152개의 품목을 조사대상으로 물가지수를 작성하고 있음.
- 생활물가지수의 계산에서는 소비자물가지수 계산에 활용되는 품목 가운데 일부품목을 활용하며, 품목별로 동일한 가중치를 기준으로 작성하고 있음.
- 생활물가지수의 작성에 이용되는 품목을 기준으로 각 품목의 전체 생활물가지수의 증가율에 대한 기여도(율)를 살펴보면 품목별 생활물가상승에 대한 영향력을 평가할 수 있음.
- 따라서 생활물가상승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품목이 관심대상 품목이 될 수 있음.
- 여기서 기여도는(비교시점품목지수-기준시점품목지수)/기준시점 총지수 × 품목가중치/전체 가중치로 계산하며,
- 기여율은 총지수의 변화율을 1로 하였을 때 개별품목의 기여한 정도를 나타냄.

<표 3> 생활물가지수 구성품목의 기여도 및 기여율(2007년 3월~2008년 3월)

순위	생활물가지수	기여도	기여율	누적기여율
	전월세포함생활물가지수	4.58%	100.00%	
	생활물가지수	4.23%	92.29%	
1	휘발유	0.68%	14.81%	14.8%
2	경유	0.47%	10.28%	25.1%
3	도시가스	0.32%	6.93%	32.0%
4	집세	0.28%	6.17%	38.2%
5	납입금(사립대학교)	0.18%	4.00%	42.2%
6	LPG(자동차용)	0.16%	3.55%	45.7%
7	등유	0.16%	3.54%	49.3%
8	과	0.13%	2.86%	52.1%
9	시내버스료	0.13%	2.74%	54.9%
10	납입금(유치원)	0.12%	2.66%	57.6%
11	공동주택관리비	0.11%	2.47%	60.0%
12	보육시설이용료	0.11%	2.44%	62.5%
13	배추	0.10%	2.08%	64.6%
14	대입학원비(종합)	0.09%	2.00%	66.6%
15	스낵과자	0.09%	2.00%	68.5%
16	감자	0.08%	1.85%	70.4%
17	라면	0.08%	1.69%	72.1%
18	대입학원비(단과)	0.07%	1.60%	73.7%
19	과일주스	0.07%	1.59%	75.3%
20	달걀	0.07%	1.58%	76.9%
21	고입학원비(단과)	0.07%	1.56%	78.4%
22	납입금(전문대학)	0.07%	1.46%	79.9%
23	보습학원비	0.07%	1.46%	81.3%
24	고입학원비(종합)	0.07%	1.45%	82.8%
25	자장면	0.06%	1.33%	84.1%
26	쌀	0.06%	1.33%	85.4%
27	전철료	0.06%	1.28%	86.7%
28	학교급식비	0.06%	1.24%	88.0%
29	LPG(취사용)	0.05%	1.20%	89.2%
30	빵	0.05%	1.12%	90.3%

자료: 통계청(www.kosis.kr), 생활물가지수(2005=100)

<그림 6> 생활물가상승 기여도 상위 30대 품목과 기여도
(2007년 3월~2008년 3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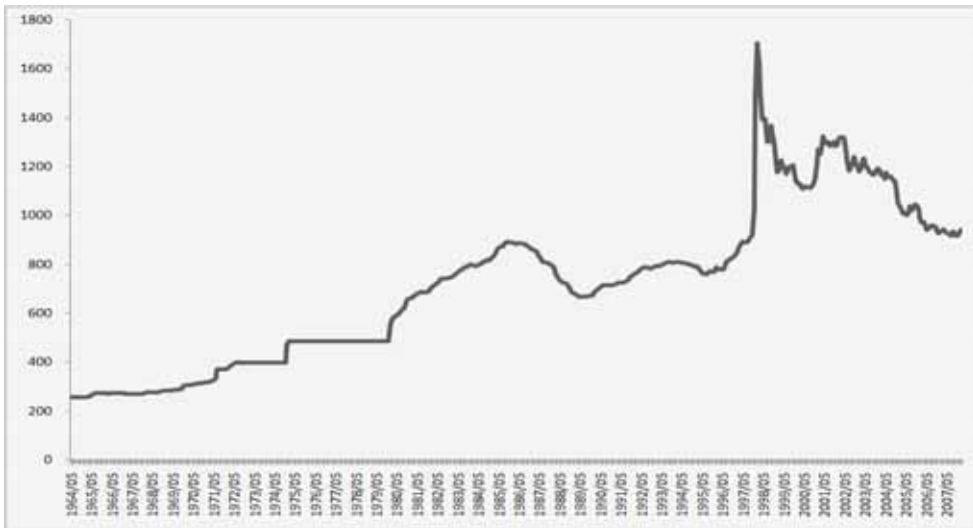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www.kosis.kr), 생활물가지수(2005=100)

2. 환율변화에 민감한 품목, 최종소비비중이 높은 품목

- 소비자물가지수 또는 생활물가지수, 심지어 생산자물가지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외부 가격상승요인으로 환율변화(절하)를 들 수 있음.
 - 환율이 급변할 경우 개별품목의 수입물가가 아니라 전체 수입물가가 동일한 비율로 증가 또는 감소함.
 - 물가관리를 위해서는 환율변화에 민감하게 가격이 변화하는 품목을 선정할 필요가 있는데, 특히 소비자물가, 또는 생활물가에 정책적 관심이 있을 경우 환율변화에 민감한 품목 가운데 일반 소비자의 소비비중이 높은 품목이 그 대상이 될 수 있음.
- 본 단위에서는 산업연관분석을 통해서 환율변화에 따른 물가과급 효과와 최종소비에서 개별품목의 소비비중을 살펴보기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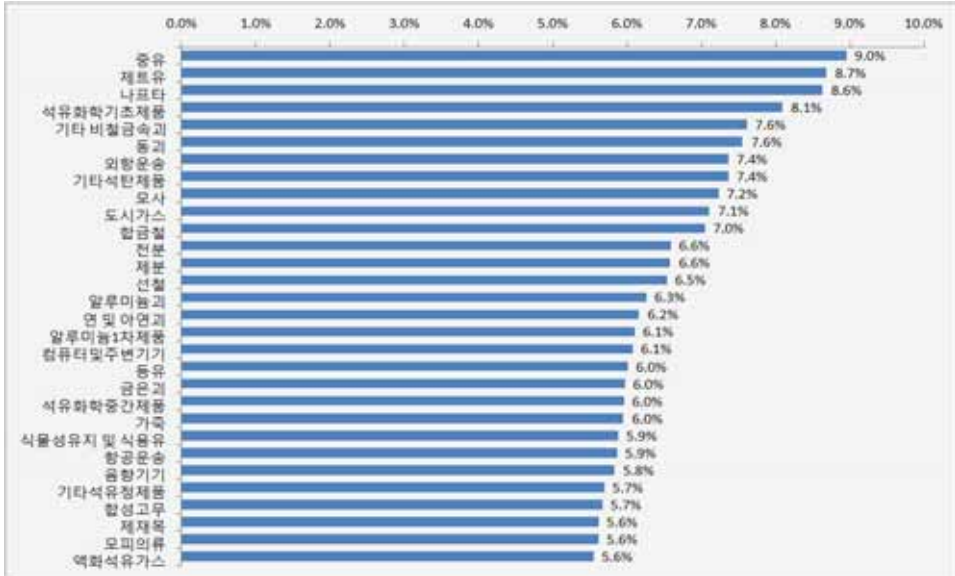
- 가능한 품목 수준에서의 물가과급효과를 계산하기 위해 산업연관표 가운데 기본부문표(404부문)를 이용하고자 함.
 -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물가과급효과를 분석할 경우에는 물가과급효과는 생산자물가에 대한 과급효과로 해석해야 함.
- 환율변화로 인한 과급효과를 살펴보면 중유, 제트유, 나프타, 석유화학기초제품 등 주로 원자재로 사용되는 품목의 가격상승효과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
- 하지만 일반 소비자들의 생활과 직접 관련된 전분, 제분, 등유, 식용유 등도 비교적 높은 가격상승요인을 가지게 됨.
 - 이는 수입원자재의 국제가격이 변화하지 않더라도 환율절상으로 인해 원유, 밀·옥수수 등 주요 원자재의 국내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임.

<그림 7> 대미달러 환율 추이



- 가상적으로 환율 10% 절하에 따른 404개 산업부문별 물가과급효과와 그 순위 및 최종소비비중을 살펴보면 다음 <그림 8> 및 <표 4>와 같음.
- 편의상 환율절하로 인한 수입원자재 가격상승의 과급효과는 그림에서는 상위 30개, 표에서는 상위 50개 품목을 제시하고자 함.

<그림 8> 환율 10% 절하에 따른 부문별 물가파급효과(상위 30대 품목)



<표 4> 환율 10% 절하에 따른 부문별 물가파급효과와 그 순위 및 민간소비비중(상위 50개 품목)

순위	품목명	파급효과	최종수요비중	순위
1	중유	8.96%	0.00%	209
2	제트유	8.69%	0.00%	255
3	나프타	8.63%	0.00%	255
4	석유화학기초제품	8.10%	0.00%	255
5	기타 비철금속괴	7.62%	0.00%	396
6	동괴	7.56%	0.00%	398
7	외항운송	7.37%	0.02%	187
8	기타석탄제품	7.36%	0.00%	255
9	모사	7.23%	0.00%	255
10	도시가스	7.11%	1.01%	25
11	합금철	7.05%	0.00%	255
12	전분	6.59%	0.00%	219
13	제분	6.59%	0.01%	189
14	선철	6.54%	-0.03%	400

<표 4> 계속

순위	품목명	파급효과	최종수요비중	순위
15	알루미늄괴	6.26%	0.00%	397
16	연 및 아연괴	6.16%	0.00%	395
17	알루미늄1차제품	6.10%	0.00%	211
18	컴퓨터 및 주변기기	6.07%	0.73%	31
19	등유	6.01%	0.53%	42
20	금은괴	5.98%	0.03%	161
21	석유화학중간제품	5.96%	0.00%	255
22	가죽	5.95%	0.00%	255
23	식물성유지 및 식용유	5.88%	0.08%	119
24	항공운송	5.86%	0.33%	57
25	음향기기	5.83%	0.11%	107
26	기타석유정제품	5.69%	0.00%	242
27	합성고무	5.67%	0.00%	255
28	제재목	5.62%	0.00%	227
29	모피의류	5.61%	0.05%	146
30	액화석유가스	5.55%	0.33%	58
31	개별소자	5.53%	0.00%	255
32	조강	5.53%	0.00%	255
33	집적회로(IC)	5.49%	0.05%	139
34	면사	5.46%	0.00%	255
35	재생섬유사	5.40%	0.00%	255
36	마직물	5.39%	0.00%	253
37	합성수지	5.38%	-0.05%	402
38	모피	5.37%	0.00%	255
39	가죽의류	5.21%	0.07%	130
40	자가발전	5.17%	0.00%	255
41	정제당	5.15%	0.02%	181
42	질소화합물	5.15%	0.00%	255
43	촬영기 및 영사기	5.11%	0.14%	97
44	항공기	5.11%	0.00%	255
45	농약	5.10%	0.00%	252
46	비료	5.08%	0.00%	244
47	기타비철금속1차제품	5.07%	0.00%	255
48	견사	5.07%	0.00%	255
49	합판	4.99%	0.00%	255
50	VTR	4.99%	0.01%	1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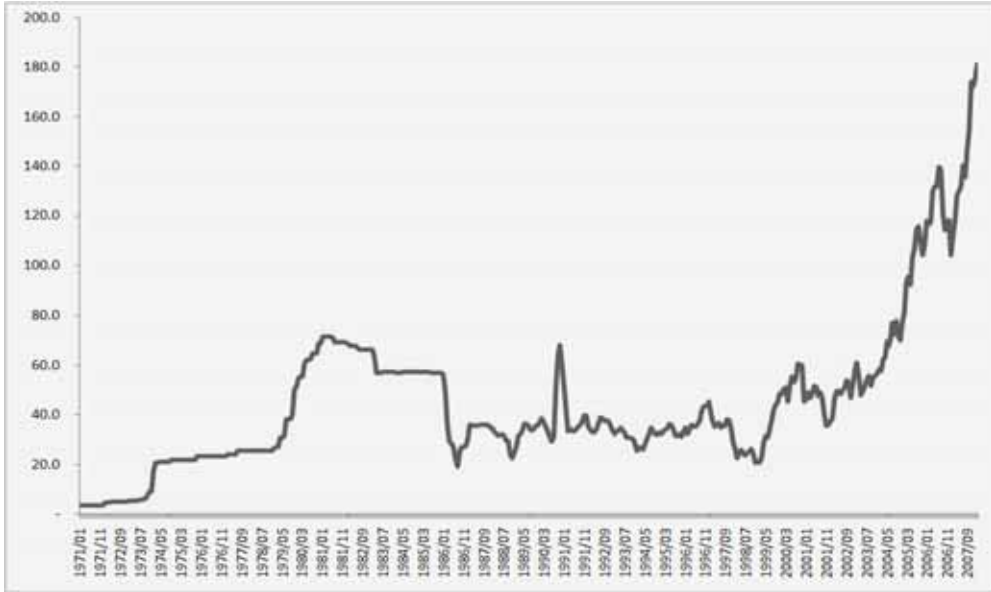
주: 1) 2003년 산업연관표 404부문으로부터 계산함.

2) 표 우측의 순위는 산업연관표 404부문 가운데에 최종소비에서 개별품목의 소비비중의 순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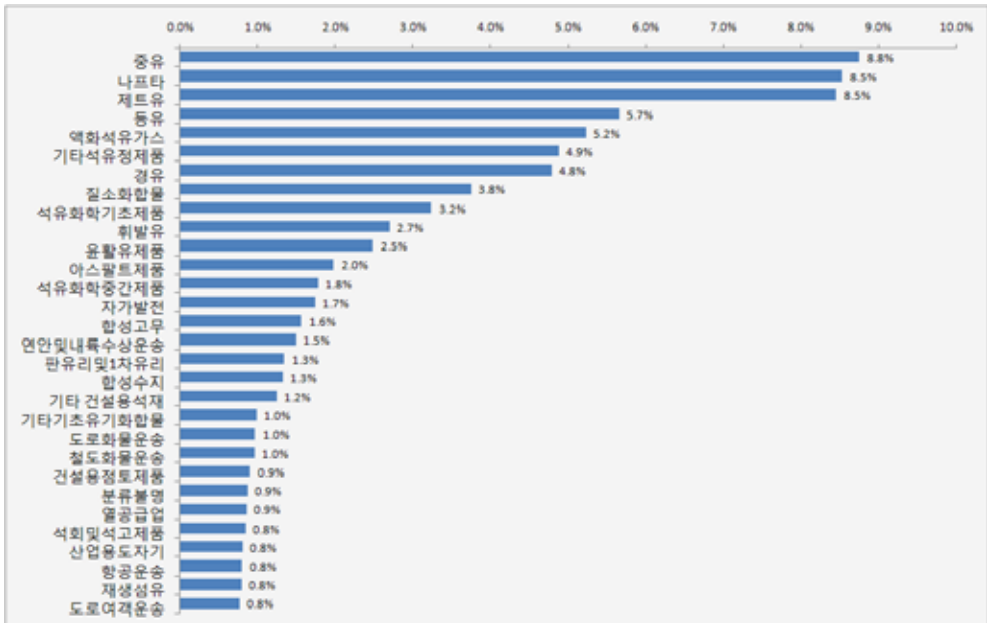
3. 원유가격 변화에 민감한 품목

- 최근 소비자 또는 생산자물가에 매우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외부요인은 국제원유가 상승임.
 - 최근의 원유가 상승은 세계경제에 과거 1차 오일쇼크(1972~73년), 2차 오일쇼크(1989~90)와 비견되는 상당한 충격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그림 9> 참조).
 -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소비하고 있는 두바이유 기준으로 물가 상승률과 석유 의존 경제구조를 감안할 때 1차 오일쇼크(1972~73년) 때 유가는 85.1달러, 2차 오일쇼크(1989~90년) 때 유가는 151.8달러에 이르고 하면서 아직 2차 오일쇼크 때처럼 경제에 큰 충격을 미칠 수준은 아니라는 분석도 있음(삼성경제연구소, 2008. 3. 3).
- 환율변화의 물가과급효과와 동일한 방법으로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물가과급효과를 살펴보면, 서민들의 생활물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품목들을 선정할 수 있음.
- 원유가 가격의 가장 커다란 물가상승 효과는 중유, 나프타, 제트유, 액화석유가스, 기타석유정제품, 석유화학기초제품 등 원자재로 활용되는 품목에서 크게 나타남.
 - 하지만 휘발유, 경유, 등유 등 유류가 상승에 따른 교통비, 화물운동, 도로여객운송비용, 광열비 등 생활물가와 관련된 품목의 가격상승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음.
- 가상적으로 원유가 10% 상승에 따른 404개 산업부문별 물가과급효과와 그 순위 및 최종소비 비중을 살펴보면 다음 <그림 10> 및 <표 5>와 같음.
 - 편의상 원유가 상승으로 인한 품목별 가격상승의 과급효과는 그림에서는 상위 30개, 표에서는 상위 50개 품목을 제시하고자 함.

<그림 9> 원유 수입가격지수 추이(달러 기준)



<그림 10> 원유가격 10% 인상에 따른 부문별 물가파급효과(상위 30개 품목)



<표 5> 원유가격 10% 인상에 따른 부문별 물가파급효과와 그 순위 및
 민간소비비중(상위 50개 품목)

순위	품목명	파급효과	민간소비비중	순위
1	중유	8.76%	0.00%	209
2	나프타	8.53%	0.00%	255
3	제트유	8.46%	0.00%	255
4	등유	5.66%	0.53%	42
5	액화석유가스	5.23%	0.33%	58
6	기타석유정제품	4.88%	0.00%	242
7	경유	4.79%	0.30%	62
8	질소화합물	3.75%	0.00%	255
9	석유화학기초제품	3.24%	0.00%	255
10	휘발유	2.70%	1.52%	17
11	윤활유제품	2.48%	0.00%	233
12	아스팔트제품	1.98%	0.00%	255
13	석유화학중간제품	1.78%	0.00%	255
14	자가발전	1.73%	0.00%	255
15	합성고무	1.56%	0.00%	255
16	연안 및 내륙수상운송	1.49%	0.04%	156
17	판유리 및 1차유리	1.34%	0.00%	231
18	합성수지	1.32%	-0.05%	402
19	기타 건설용 석재	1.24%	0.00%	255
20	기타기초유기화합물	0.99%	0.00%	255
21	도로화물운송	0.96%	0.16%	91
22	철도화물운송	0.96%	0.00%	236
23	건설용점토제품	0.90%	0.00%	255
24	분류불명	0.87%	-0.05%	401
25	열공급업	0.86%	0.11%	106

<표 5> 계속

순위	품목명	파급효과	민간소비비중	순위
26	석회 및 석고제품	0.84%	0.00%	221
27	산업용도자기	0.80%	0.00%	255
28	항공운송	0.80%	0.33%	57
29	재생섬유	0.79%	0.00%	255
30	도로여객운송	0.77%	2.39%	9
31	화력	0.73%	0.70%	35
32	합성섬유	0.71%	0.00%	255
33	가정용도자기	0.70%	0.05%	147
34	내수면어종	0.70%	0.01%	205
35	정제염	0.64%	0.00%	216
36	재생 및 강화목재	0.64%	0.00%	255
37	접착제 및 젤라틴	0.64%	0.00%	241
38	끈, 로프 및 어망	0.62%	0.00%	214
39	쇄석	0.61%	0.00%	255
40	플라스틱 1차제품	0.61%	0.00%	255
41	철도여객운송	0.61%	0.34%	56
42	기타유리제품	0.59%	0.04%	151
43	석면 및 암면제품	0.58%	0.00%	255
44	산업용플라스틱제품	0.55%	0.17%	83
45	비료	0.55%	0.00%	244
46	내화요업제품	0.54%	0.00%	255
47	도료	0.54%	0.00%	225
48	염료, 안료 및 유연제	0.54%	0.00%	255
49	콘크리트제품	0.53%	0.00%	255
50	기타토석제품	0.51%	0.00%	255

주: 1) 2003년 산업연관표 404부문으로부터 계산함.

2) 표 우측의 순위는 산업연관표 404부문 가운데에 최종소비에서 개별품목의 소비비중의 순위임.

4. 밀·옥수수 가격변화에 민감한 품목

- 한국의 곡물 수입량은 세계 5위 수준으로 주식인 쌀의 자급률 98.8%를 제외한 다른 곡물의 자급률은 5%(밀 46%, 옥수수 0.8%, 콩 11.3%)에 지나지 않는 등 전체적으로 28%의 낮은 식량자급률을 보유
 - 농업생산물의 가격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즉 애그플레이션(agflation)의 우려가 가시화되고 있음. 미 농무부 전망에 따르면 올 여름 전 세계 곡물 재고율은 14.6%로, 1972~73년 곡물 파동 때의 15.4%보다 하락하여 사상 최저 수준임.
 - 곡물가격의 상승요인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바이오에너지 개발 열기로 옥수수·콩의 부족, 중국·인도 등 신흥시장의 육류소비 증가에 따른 사료수요 급증, 달러 약세에 따른 투기자본의 곡물시장 개입, 유가상승으로 인한 곡물 운임비용의 인상 등 복합적 원인에 의해 초래됨.
 - 주요 곡물수출국들은 식량 자원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러시아는 2007년 11월, 보리와 밀에 각각 30%와 10%의 수출관세를 부과하였으며, 우크라이나는 밀·옥수수·콩 등에 수출한도를 설정함. 또한 중국은 1월부터 쌀·옥수수·밀가루 등에 5~25%의 수출관세 부과하였으며, 밀 생산대국인 카자흐스탄 역시 수출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함.
- 따라서 밀·옥수수의 수입가격상승은 앞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서 식품의 가격상승뿐만 아니라 사료가격의 상승을 통한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와 같은 육류가격을 상승시켜 서민의 생활물가를 상승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임.
- 역시 환율, 원유가격 변화의 물가파급효과와 동일한 방법으로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물가파급효과를 살펴보면, 서민들의 생활물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품목들을 선정할 수 있음.
- 밀·옥수수 가격의 가장 커다란 물가상승효과는 생활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음식료품에서 크게 나타나고 있음.
 - 특히 밀가루, 국수, 빵 및 과자, 각종 육류와 우유 등의 물가상승에 크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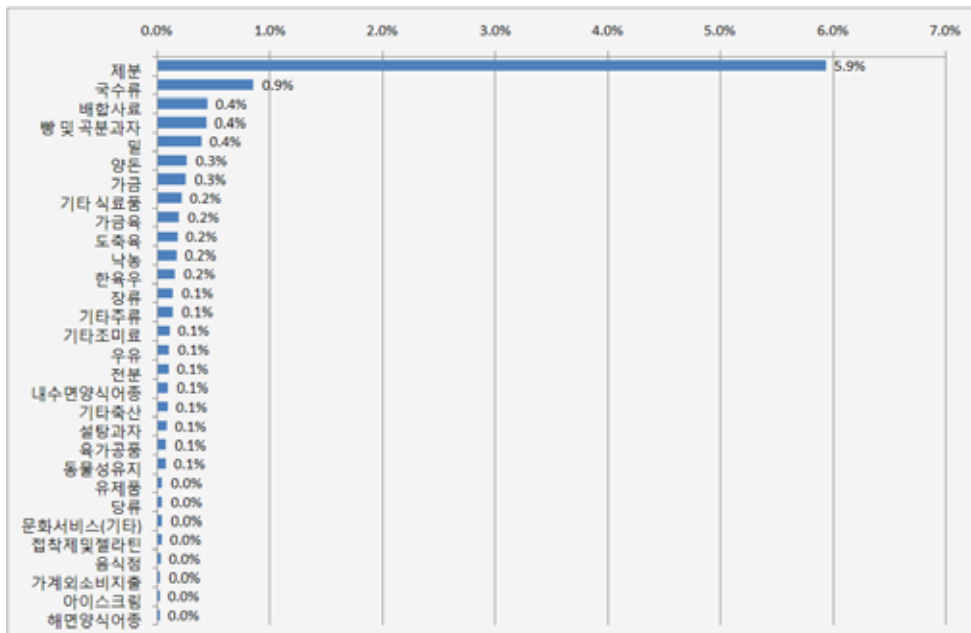
기여하고 있음.

- 이는 원유가 상승, 환율절하가 주로 산업의 기초 원자재의 가격, 교통비의 가격을 높이는 데 반해, 밀·옥수수 가격 상승은 기초생활에 필요한 음식료품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가상적으로 밀과 옥수수 국제가격이 10% 상승함에 따른 404개 산업부문별 물가파급효과와 그 순위 및 최종소비 비중을 살펴보면 다음 <그림 11> 및 <표 6>과 같음.

- 편의상 밀·옥수수 가격 상승으로 인한 품목별 가격상승의 파급효과는 그림에서는 상위 30개, 표에서는 상위 50개 품목을 제시하고자 함.

<그림 11> 밀 수입가격 10% 인상에 따른 부문별 물가파급효과
(상위 30대 품목)



<표 6> 밀 수입가격 10% 인상에 따른 부문별 물가파급효과와 그 순위 및
 민간소비비중(상위 50개 품목)

순위	품목명	파급효과	민간소비비중	순위
1	제분	5.94%	0.01%	189
2	국수류	0.86%	0.25%	67
3	배합사료	0.45%	0.03%	168
4	빵 및 곡분과자	0.44%	0.72%	32
5	밀	0.39%	0.00%	230
6	양돈	0.27%	0.00%	255
7	가금	0.26%	0.12%	105
8	기타 식료품	0.22%	0.47%	45
9	가금육	0.20%	0.16%	90
10	도축육	0.18%	0.82%	29
11	낙농	0.18%	0.00%	255
12	한육우	0.16%	0.00%	255
13	장류	0.15%	0.07%	123
14	기타주류	0.14%	0.36%	53
15	기타조미료	0.11%	0.23%	73
16	우유	0.11%	0.27%	66
17	전분	0.10%	0.00%	219
18	내수면양식어종	0.10%	0.02%	177
19	기타축산	0.09%	0.05%	148
20	설탕과자	0.08%	0.30%	65
21	육가공품	0.08%	0.21%	77
22	동물성유지	0.08%	0.00%	251
23	유제품	0.05%	0.34%	54
24	당류	0.05%	0.01%	204
25	문화서비스(기타)	0.05%	0.07%	1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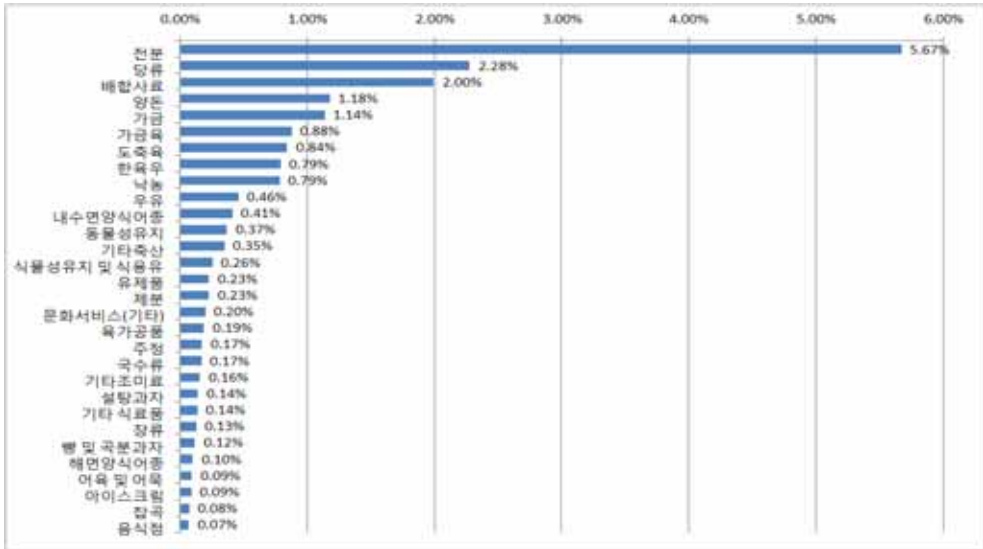
<표 6> 계속

순위	품목명	파급효과	민간소비비중	순위
26	접착제 및 젤라틴	0.04%	0.00%	241
27	음식점	0.03%	7.13%	2
28	가계 외 소비지출	0.03%	0.00%	255
29	아이스크림	0.03%	0.20%	79
30	해면양식어종	0.02%	0.07%	129
31	분류불명	0.02%	-0.05%	401
32	기타 수산식품	0.01%	0.10%	114
33	누룩 및 맥아	0.01%	0.00%	238
34	과실 및 채소가공품	0.01%	0.23%	74
35	주정	0.01%	0.00%	255
36	어육 및 어묵	0.01%	0.11%	108
37	모피	0.01%	0.00%	255
38	가죽	0.01%	0.00%	255
39	기타사회단체	0.01%	1.04%	24
40	두부	0.01%	0.07%	127
41	가정용도자기	0.01%	0.05%	147
42	면직물	0.00%	0.00%	237
43	사회복지사업(비영리)	0.00%	0.52%	43
44	청량음료	0.00%	0.55%	39
45	산업 및 전문단체	0.00%	0.00%	255
46	농림어업서비스	0.00%	0.00%	255
47	수산통조림	0.00%	0.03%	160
48	기타오락서비스	0.00%	2.02%	11
49	모피의류	0.00%	0.05%	146
50	문화서비스(국공립)	0.00%	0.17%	84

주: 1) 2003년 산업연관표 404부문으로부터 계산함.

2) 표 우측의 순위는 산업연관표 404부문 가운데에 최종소비에서 개별품목의 소비비중의 순위임.

<그림 12> 옥수수 가격 10% 인상에 따른 부문별 물가파급효과(상위 30대 품목)



<표 7> 옥수수 가격 10% 인상에 따른 부문별 물가파급효과와 그 순위 및 민간소비비중(상위 50개 품목)

순위	품목명	파급효과	최종소비비중	순위
1	전분	5.67%	0.00%	219
2	당류	2.28%	0.01%	204
3	배합사료	2.00%	0.03%	168
4	양돈	1.18%	0.00%	255
5	가금	1.14%	0.12%	105
6	가금육	0.88%	0.16%	90
7	도축육	0.84%	0.82%	29
8	한육우	0.79%	0.00%	255
9	낙농	0.79%	0.00%	255
10	우유	0.46%	0.27%	66
11	내수면양식어종	0.41%	0.02%	177
12	동물성유지	0.37%	0.00%	251
13	기타축산	0.35%	0.05%	148
14	식물성유지 및 식용유	0.26%	0.08%	119
15	유제품	0.23%	0.34%	54

<표 7> 계속

순위	품목명	파급효과	최종소비비중	순위
16	제분	0.23%	0.01%	189
17	문화서비스(기타)	0.20%	0.07%	125
18	육가공품	0.19%	0.21%	77
19	주정	0.17%	0.00%	255
20	국수류	0.17%	0.25%	67
21	기타조미료	0.16%	0.23%	73
22	설탕과자	0.14%	0.30%	65
23	기타 식료품	0.14%	0.47%	45
24	장류	0.13%	0.07%	123
25	빵 및 곡분과자	0.12%	0.72%	32
26	해면양식어종	0.10%	0.07%	129
27	어육 및 어묵	0.09%	0.11%	108
28	아이스크림	0.09%	0.20%	79
29	잡곡	0.08%	0.01%	190
30	음식점	0.07%	7.13%	2
31	청량음료	0.07%	0.55%	39
32	발효조미료	0.06%	0.02%	173
33	두부	0.06%	0.07%	127
34	가계 외 소비지출	0.05%	0.00%	255
35	분류불명	0.05%	-0.05%	401
36	기타 수산식품	0.05%	0.10%	114
37	골판지 및 골판지상자	0.05%	0.00%	248
38	맥주	0.04%	0.37%	50
39	소주	0.04%	0.21%	75
40	기타주류	0.03%	0.36%	53
41	수산통조림	0.03%	0.03%	160
42	모피	0.03%	0.00%	255
43	비누 및 세제	0.03%	0.15%	93
44	가죽	0.03%	0.00%	255
45	인쇄용지	0.03%	0.00%	210
46	과실 및 채소가공품	0.03%	0.23%	74
47	가정용도자기	0.02%	0.05%	147
48	기타원지 및 판지	0.02%	0.01%	207
49	커피 및 차류	0.02%	0.10%	111
50	농림어업서비스	0.01%	0.00%	255

주: 1) 2003년 산업연관표 404부문으로부터 계산함.

2) 표 우측의 순위는 산업연관표 404부문 가운데에 최종소비에서 개별품목의 소비비중의 순위임.

IV. 정부의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물가대책의 평가

1. 주요 내용

(1) 점검대상 생활필수품 품목선정

- 소득 2분위 이하(전체 가구의 40%, 월소득 247만 원 이하) 저소득층의 구입빈도가 높고, 소비지출 비중이 높은 52개 품목을 선정함.
 - 아울러 소비자단체,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함.

(2) 부문별 집중 점검 및 대응방안

① 공공요금

- 공공요금을 동결, 지속적 효율성 제고를 통해 원가상승요인을 해소하고자 함.
- 단기대책
 - 전기료·전화료 등 중앙공공요금(17개) 동결
 - 대중교통요금, 상하수도료 등 지자체에서 결정하는 지방공공요금(11개)에 대해 요금인상 억제 요청
- 구조적 대책
 - 공공요금의 원가상승요인을 최대한 자체 흡수

② 농산물

- 할당관세 인하, 비축물자 방출 확대, 유통구조 개선 추진
- 단기대책
 - 밀·옥수수 등 가공용·사료용 원료로 사용되는 물품과 요소·무수암모니아 등 농업용 원자재를 무관세화, 옥수수·대두 등 14개 품목에 대한 시장접근물량 확대

- 비축 농수산물(고추·고등어 등 14종) 방출조정 및 계약재배(배추·무 등 16종)를 통한 가격안정

구조적 대책

- 농·수산물 직거래 확대, 농수협의 유통기능 활성화
- 시·군에 전문경영체제를 갖춘 유통회사를 설립하여 농어업인 소득을 제고하고, 농수산물 가격안정을 도모

③ 공산품

할당관세 인하·비축기능 강화·경쟁촉진 등 시장기능 활성화

단기대책

- 휘발유 등 석유제품에 대한 할당관세(3%) 대폭 인하하여 수입확대 및 국내업체와의 경쟁 유도
- 주유소 가격정보 시스템을 조기가동
- 비철금속 등 원자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비축물자 방출량을 대폭 확대
- 소비자보호협의회를 중심으로 8개 소비자단체가 참여한 원가상승요인 이상의 가격인상사례 조사

구조적 대책

- 석유제품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대형할인점의 유통시장참여, 유통시장 위주 가격결정체제 확립, 주유소 복수상표제 활성화 등 추진

④ 주거비

서민계층의 주택구입, 임차부담 완화

- 저소득층 등에 대한 전세자금 지원규모와 지원대상 확대
- 택지비 인하 등을 통한 분양가 추가 인하

⑤ 개인서비스

서민계층에 가장 부담을 주고 있는 학원비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대응노력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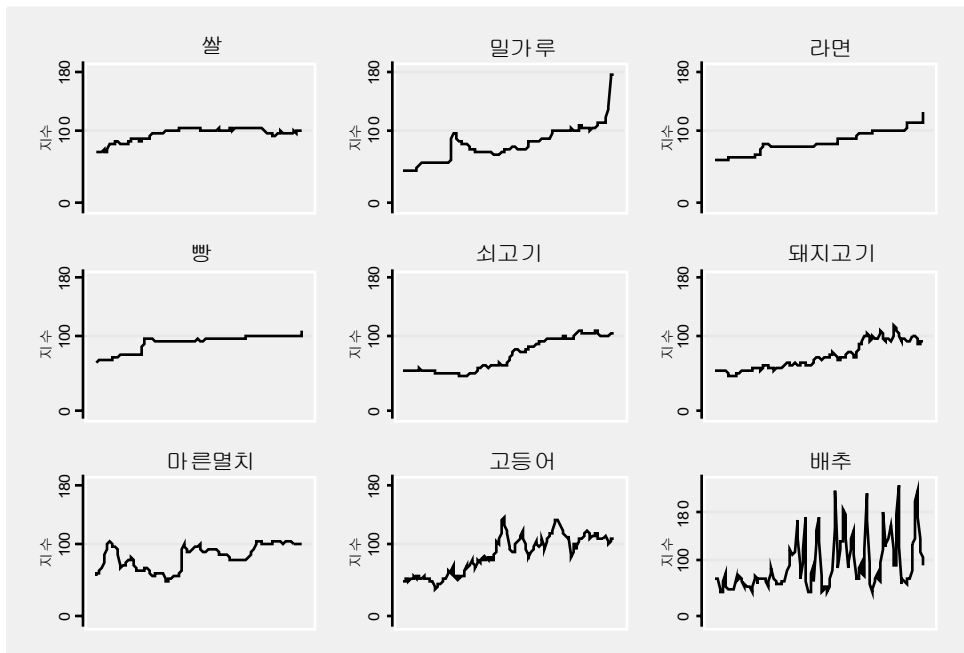
(3) 부문별 집중 점검 및 대응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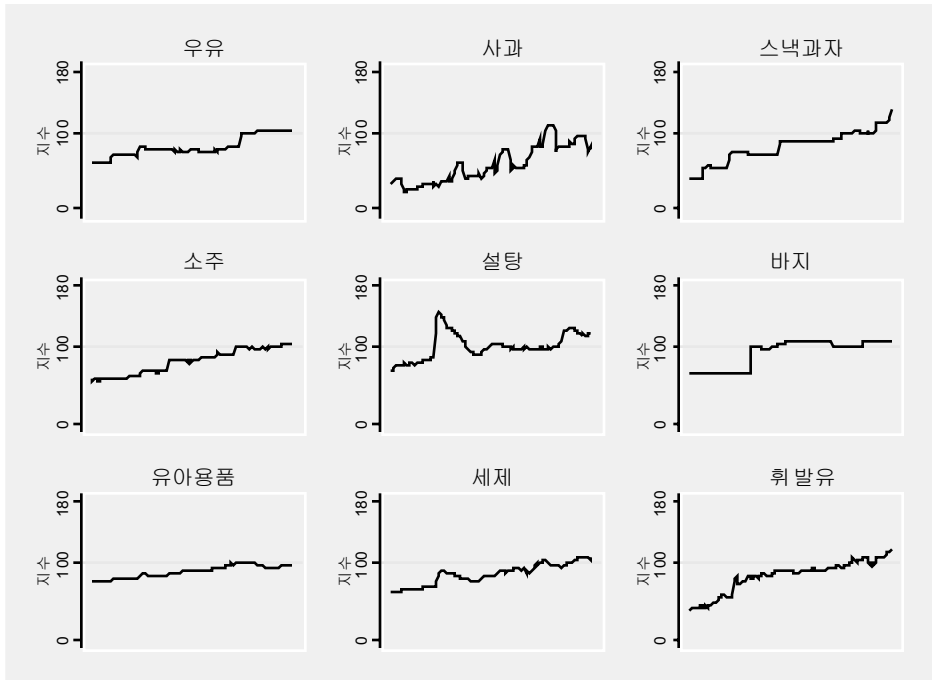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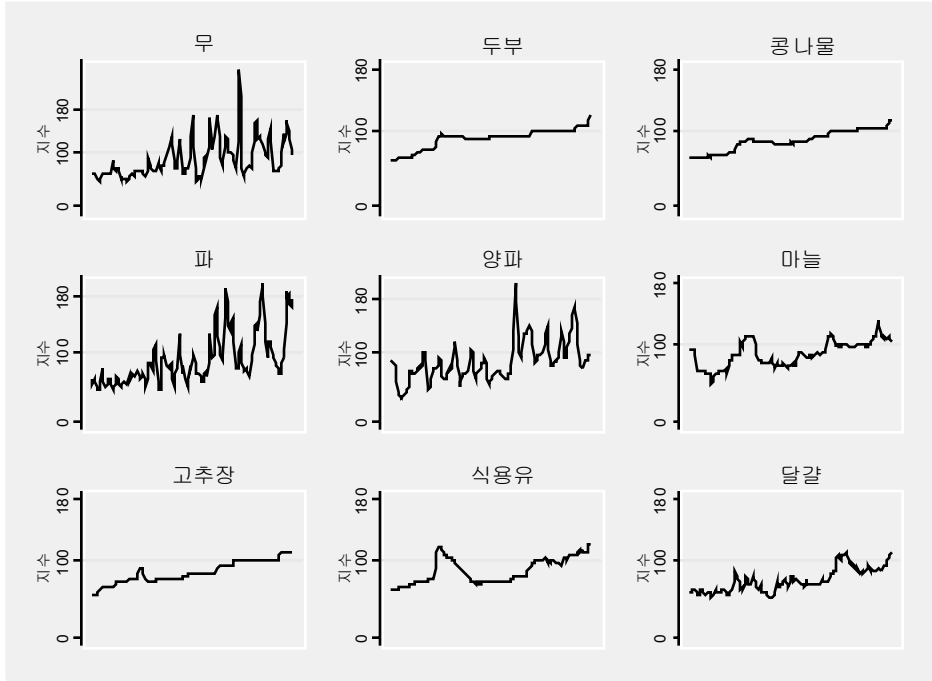
- 서민생활 안정 T/F를 구성하여 52개 생활필수품 가격 동향 및 대응상황을 점검
- 2차 서민생활 안정 T/F에서 각 품목의 가격동향 및 부처별 실천계획 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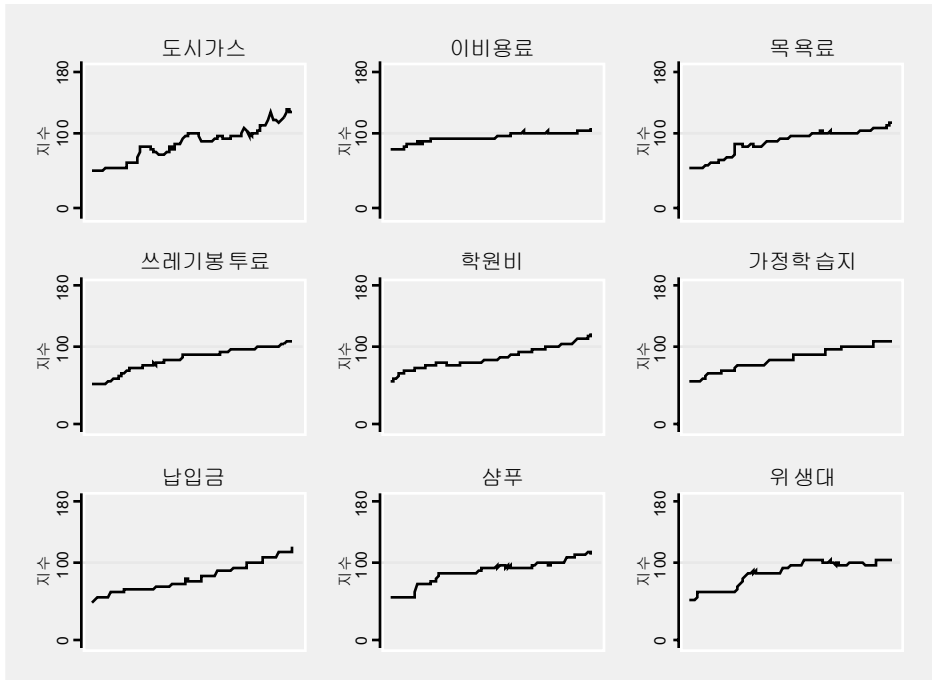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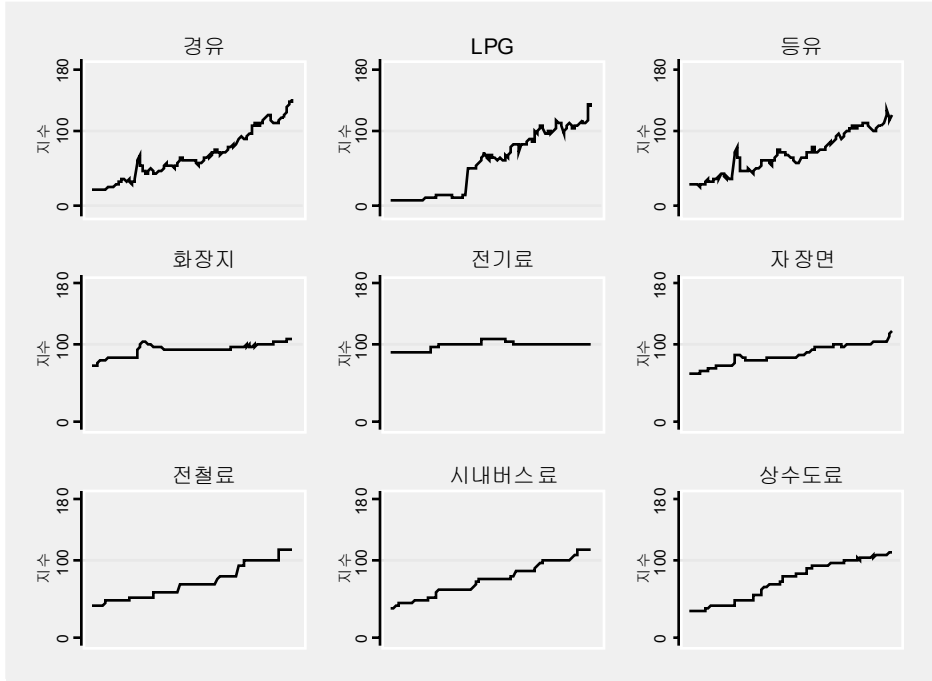
2. 서민생활물가 52개 품목의 가격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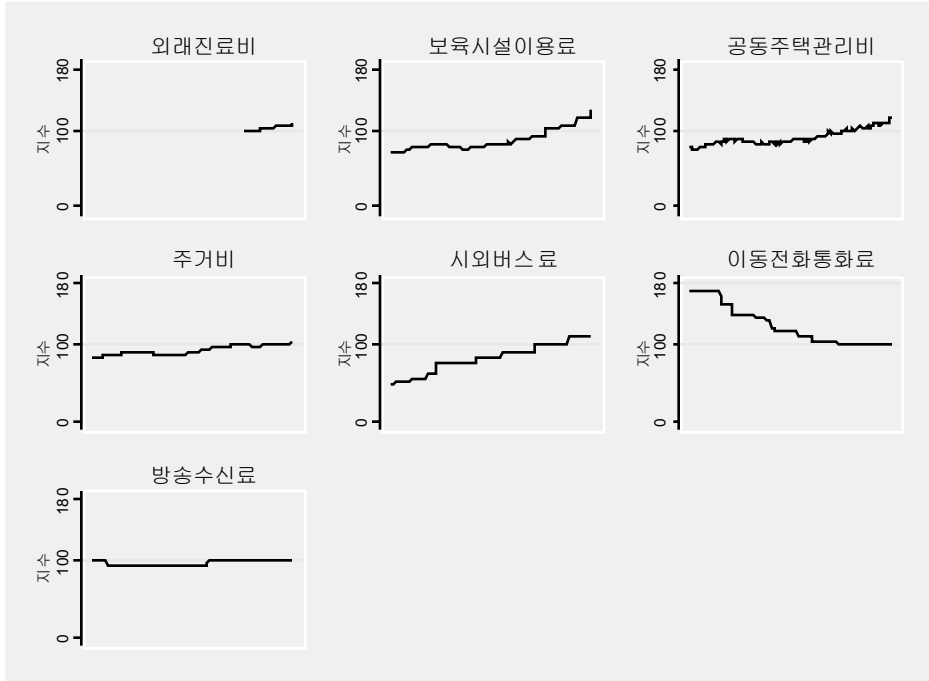
- 서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품목으로 이번 관리대상 품목에 포함된 품목 수는 52개이나 납입금, 교육비 등에는 생활물가 작성에 사용되는 다수의 품목이 포함됨.
 - 따라서 소비자 또는 생활물가 작성 기준으로 볼 때 실제 72개 정도가 관리대상이 되고 있음.

<그림 13> 서민생활물가 구성품목의 물가지수 추세(1991년 1월~2008년 3월)









3. 평가

(1) 관리대상 품목의 과다

- 물가관리를 위해 저소득계층의 구입 빈도가 높고, 소비지출 비중이 높은 52개 품목을 선정하여, 서민들의 실생활과 관련된 주요 품목을 선정하였다는 점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선택임.
 - 하지만 소비자물가, 생활물가지수 작성을 위한 하위품목 기준으로는 실제 72개 내외의 품목이 관리대상이 되고 있어서 소비자물가 작성의 489개, 생활물가지수 작성의 152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 않음.
- 실제 서민생활물가를 구성하는 개별품목의 서민생활물가상승에 대한 기여도(율)를 보면 불과 몇 개 품목의 물가상승이 전체 서민생활 물가를 주도하고 있음.

- 이런 추세는 전년동기 대비 물가상승률(2007년 3월~2008년 3월)에서뿐만 아니라 2000년 이후 비교적 장기적인 추세로 파악되고 있음.
 - 가령 2008년 3월 기준 전년동기 대비 물가상승률을 다음 <표 8>에서 보면, 서민생활물가를 크게 증가시키는 품목은 휘발유, 경유, 납입금, 학원비인데 이들 품목의 서민물가상승에 대한 누적 기여율은 무려 50%에 근접하고 있음.
 - 여기에 도시가스, 주거비, LPG, 등유, 파, 시내버스료, 주택관리비를 포함하면 서민생활물가의 80%를 상승시키고 있음.
- 따라서 지나친 시장개입을 자제하겠다는 정부의 물가관리 측면에서 본다면 비교적 많은 품목들이 관리대상이 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표 8> 서민생활물가 구성품목의 전년동기 대비 물가상승률 및 기여율

서민물가 품목명	가중치	서민물가 가중치	증가율	기여도	기여율	순위	누적 기여율
서민생활물가지수 (주거비 포함)	474.8	1.0000	5.8%	5.8%	100%		
서민생활물가지수	377.3	0.7946	6.7%	5.4%	93.1%		
휘발유	31.2	0.0657	14.7%	0.9%	16.2%	1	16.2%
경유	10.9	0.0230	26.9%	0.7%	11.3%	2	27.5%
납입금	40.6	0.0855	6.6%	0.6%	10.7%	3	38.2%
- 납입금(유치원)	8.5	0.0179	8.2%	0.2%	2.9%		
- 납입금(고등학교)	7.9	0.0166	1.9%	0.0%	0.5%		
- 납입금(사립대학교)	15.4	0.0324	7.1%	0.3%	4.4%		
- 납입금(국공립대학교)	3.5	0.0074	8.5%	0.1%	1.2%		
- 납입금(전문대학)	5.3	0.0112	7.5%	0.1%	1.6%		
학원비	42.1	0.0887	5.9%	0.6%	9.6%	4	47.8%
- 피아노학원비	4.8	0.0101	4.2%	0.0%	0.8%		
- 보습학원비	5.9	0.0124	7.3%	0.1%	1.6%		
- 대입학원비(단과)	7.8	0.0164	5.9%	0.1%	1.8%		
- 고입학원비(단과)	7.8	0.0164	5.8%	0.1%	1.7%		
- 대입학원비(종합)	7.9	0.0166	6.9%	0.1%	2.2%		
- 고입학원비(종합)	7.9	0.0166	5.1%	0.1%	1.6%		

<표 8> 계속

서민물가 품목명	가중치	서민물가 가중치	증가율	기여도	기여율	순위	누적 기여율
도시가스	16.1	0.0339	12.1%	0.4%	7.6%	5	55.4%
주거비	97.5	0.2053	2.0%	0.4%	6.8%	6	62.2%
LPG	6.2	0.0131	22.8%	0.3%	5.2%	7	67.4%
- LPG(취사용)	1.3	0.0027	25.5%	0.1%	1.3%		
- LPG(자동차용)	4.9	0.0103	22.0%	0.2%	3.9%		
등유	5.4	0.0114	20.6%	0.2%	3.9%	8	71.3%
과	0.9	0.0019	134.5%	0.2%	3.1%	9	74.4%
시내버스료	11.4	0.0240	7.1%	0.2%	3.0%	10	77.4%
공동주택관리비	12.4	0.0261	5.8%	0.2%	2.7%	11	80.1%
보육시설이용료	9.9	0.0209	6.6%	0.2%	2.7%	12	82.8%
배추	1.9	0.0040	60.8%	0.1%	2.3%	13	85.1%
스낵과자	2.2	0.0046	28.4%	0.1%	2.2%	14	87.3%
라면	2.5	0.0053	21.1%	0.1%	1.9%	15	89.2%
달걀	2.1	0.0044	27.7%	0.1%	1.7%	16	90.9%
자장면	3.1	0.0065	13.0%	0.1%	1.5%	17	92.4%
쌀	14	0.0295	3.1%	0.1%	1.5%	18	93.8%
전철료	3.6	0.0076	10.9%	0.1%	1.4%	19	95.2%
빵	4.6	0.0097	7.9%	0.1%	1.3%	20	96.5%
- 빵	3.2	0.0067	11.0%	0.1%	1.2%		
- 식빵	0.4	0.0008	2.3%	0.0%	0.0%		
- 케이크	1	0.0021	0.1%	0.0%	0.0%		
이미용료	10.1	0.0213	3.5%	0.1%	1.2%	21	97.7%
- 이용료	1.5	0.0032	0.7%	0.0%	0.0%		
- 미용료	8.6	0.0181	4.0%	0.1%	1.2%		
목욕료	3.6	0.0076	8.0%	0.1%	1.0%	22	98.8%
외래진료비	12.6	0.0265	2.0%	0.1%	0.9%	23	99.7%

(2) 과도한 시장개입의 위험

- 정부는 물가상승의 직접적 원인이 원가상승에 있는 경우 정부가 직접적 가격규제는 하지 않도록 하되, 할당관세 적용, 유통구조 개선, 시장경쟁 촉진을 통해 가격안정기반을 마련할 것이며 불필요한 시장개입은 자제하겠다는 입장임.
 - 하지만 10일 주기로 가격동향을 집중 모니터링하며, 매월 1일 소비자물가지수 발표 후 서민생활 안정 T/F를 통해 52개 품목의 가격동향을 집중 점검하기로 함.
- 서민생활물가상승에 유류, 교육비, 주거비 등이 큰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타 품목까지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경우 이는 해당업체에는 실제적인 “가격통제”로 작용할 것이므로 불필요한 시장개입이 될 것이 분명함.
 - 따라서 불필요한 시장왜곡을 가능한 한 방지한다는 차원에서는 관심대상 품목을 유류, 교육비, 주거비 등 최소품목으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실제 원유, 밀·옥수수 가격 상승으로 인한 원가상승요인을 관련 업계가 반영하지 못할 경우 업계의 수익성 악화, 다른 회피수단 시도 등으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또한 업종별 역차별의 문제가 대두될 여지도 있음.
- 2008년 2월 현재, 전년동기 대비 원유, 밀·옥수수 가격 상승(달러화 기준)의 국내 생산자 물가에 대한 과급효과를 서민생활물가를 구성하는 52개 품목과 매칭하여 살펴보면 상당한 원가상승요인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지난 1년간 환율 0.82% 절하, 원유가 61.8% 상승, 밀가격 169.7% 상승, 옥수수 가격 53% 상승의 효과를 살펴보면 다음 <표 9>에서 보듯이 서민생활물가 관련 품목에서 상당한 원가상승요인이 발생하고 있음.
 - 특히 등유, 경유, 액화석유가스, 휘발유 등 유류와 교통요금,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우유, 밀가루, 라면 등에서 매우 높은 원가상승이 이루어지고 있음.

- 이런 원가상승요인을 업계가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경우 업계의 수익성 악화와 경영난, 타 업계와의 형평성, 다른 회피수단 시도 등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음.
-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제조업체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업계애로 실태조사”에 의하면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해 “이미 감내할 수준을 넘어섰다”는 응답이 51.6%에 달했으며, 25% 정도는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제품가격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응답하여 원자재 가격 상승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커질 것으로 전망됨.

<표 9> 서민생활물가 구성품목에 대한 환율, 원유, 밀·옥수수 국제가격변화의 국내물가 파급효과

서민물가 품목번호	품목명	산업 분류 기준	산업명	환율 절하	원유가 인상	밀가격 인상	옥수수 가격인상	소계
1	쌀	57	정미	0.0%	0.7%	0.0%	0.0%	0.8%
2	밀가루	59	제분	0.5%	0.7%	100.8%	1.2%	103.3%
3	라면	66	국수류	0.2%	1.3%	14.5%	0.9%	17.0%
4, 21	빵 및 스낵과자	64	빵 및 곡분과자	0.2%	1.5%	7.5%	0.6%	9.8%
5, 6	쇠고기·돼지고기	46	도축육	0.2%	1.3%	3.1%	45%	9.1%
7, 8	멸치·고등어	27	해면어종	0.2%	2.4%	0.0%	0.0%	2.7%
9, 10, 12, 13, 14, 15	배추·무·콩나물·파·양파·마늘	5	채소	0.1%	0.6%	0.0%	0.0%	0.8%
11	두부	77	두부	0.2%	2.4%	0.1%	0.3%	3.0%
16	고추장	70	장류	0.2%	1.8%	2.5%	0.7%	5.1%
17	식용유	72	식물성유지 및 식용유	0.5%	1.3%	0.0%	14%	3.2%
18	달걀	21	가금	0.3%	0.8%	4.3%	60%	11.5%
19	우유	18	낙농	0.2%	1.7%	3.0%	42%	9.1%
		49	우유	0.2%	1.8%	1.8%	25%	6.3%
20	사과	6	과실	0.1%	1.0%	0.0%	0.0%	1.2%
22	소주	80	소주	0.1%	0.9%	0.0%	0.2%	1.2%
23	설탕	61	정제당	0.4%	2.0%	0.0%	0.0%	2.4%
24	바지	103	편직제의류	0.3%	1.5%	0.0%	0.0%	1.8%
25	유이용품(분유)	50	유제품	0.2%	1.4%	0.8%	1.2%	3.6%
25	유이용품(소아용의복)	105	직물제의류	0.2%	1.1%	0.0%	0.0%	1.4%

<표 9>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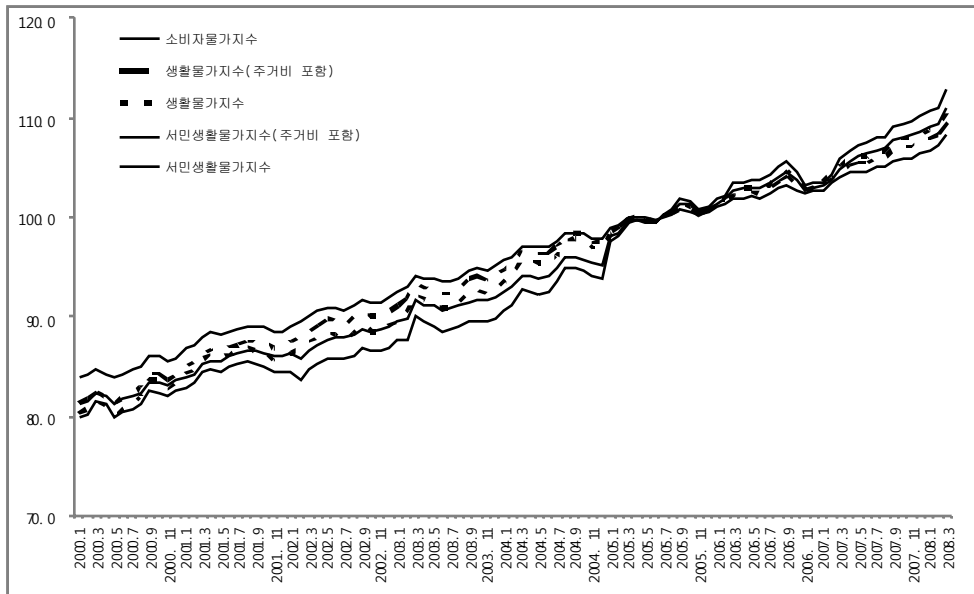
서민물가 품목번호	품목명	산업 분류 기준	산업명	환율 절하	원유가 인상	밀가격 인상	옥수수 가격인상	소계
25, 31, 45	유아용품(종이거저귀), 화장지, 위생대	131	위생용품이제품	0.3%	1.5%	0.0%	0.0%	1.8%
26	세제	163	비누 및 세제	0.3%	2.5%	0.1%	0.1%	2.9%
27	휘발유	140	휘발유	0.2%	16.7%	0.0%	0.0%	16.9%
28	경유	143	경유	0.4%	29.6%	0.0%	0.0%	30.0%
29	LPG	145	액화석유가스	0.5%	32.3%	0.0%	0.0%	32.8%
30	등유	142	등유	0.5%	35.0%	0.0%	0.0%	35.5%
32	전기료	305	수력	0.1%	0.3%	0.0%	0.0%	0.4%
		306	화력	0.3%	4.5%	0.0%	0.0%	4.8%
		307	원자력	0.1%	0.4%	0.0%	0.0%	0.5%
33	자장면	331	음식점	0.1%	1.2%	0.6%	0.4%	2.3%
34	전철료	319	지하철시설	0.1%	1.4%	0.0%	0.0%	1.6%
35, 50	시내버스료, 시외버스료	335	도로여객운송	0.1%	4.7%	0.0%	0.0%	4.9%
36	상수도료	311	수도	0.1%	0.8%	0.0%	0.0%	0.9%
37	도시가스료	309	도시가스	0.6%	0.1%	0.0%	0.0%	0.7%
38	이미용료	399	이용 및 미용	0.1%	0.7%	0.0%	0.0%	0.7%
39	목욕료	401	기타개인서비스	0.1%	1.4%	0.0%	0.0%	1.6%
40	쓰레기 봉투료	386	위생서비스(국공립)	0.1%	2.3%	0.0%	0.0%	2.5%
41, 42	학원비, 가정학습지	376	교육기관(산업)	0.1%	1.0%	0.0%	0.0%	1.0%
42	가정학습지	389	문화서비스(기타)	0.1%	0.9%	0.8%	1.1%	2.9%
43, 47	납입금, 보육기관 이용료	374	교육기관(국공립)	0.0%	0.8%	0.0%	0.0%	0.9%
		375	교육기관(사립)	0.0%	0.4%	0.0%	0.0%	0.5%
44	삼푸	162	화장품 및 치약	0.2%	1.2%	0.0%	0.0%	1.4%
46	외래진료비	381	의료 및 보건 (국공립)	0.1%	0.8%	0.0%	0.0%	0.9%
		382	의료 및 보건 (비영리)	0.1%	0.6%	0.0%	0.0%	0.8%
		383	의료 및 보건(산업)	0.1%	0.5%	0.0%	0.0%	0.7%
48, 49	공동주택관리비, 주거비	358	주택소유	0.0%	0.2%	0.0%	0.0%	0.2%
51	이동전화통화료	347	전화	0.1%	0.3%	0.0%	0.0%	0.4%
52	유선방송수신료	351	유선방송	0.1%	0.6%	0.0%	0.0%	0.8%

주: 2008년 2월 현재 지난 1년간(전년동기 대비) 환율 0.82% 절하, 원유가 61.8% 상승, 밀가격 169.7% 상승, 옥수수 가격 53% 상승(달러 기준)의 국내 물가상승에 대한 파급효과임.

(3) 생활물가지수와 서민생활물가지수의 차별화 미흡

- 당초 서민물가 관리목적이 현행 소비자물가 및 생활물가지수가 실제 서민들이 느끼는 물가수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서민생활과 관련된 체감도를 제대로 반영하는 물가지수 작성을 고려하였으나 공식통계로 작성하지 않기로 함.
- 본 연구에서 서민생활을 위한 52개 관리대상 품목으로 가칭 “서민생활물가”를 작성해 볼 경우 지난 1년간 생활물가지수에 비해 비교적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이는 소비자물가, 생활물가 가운데 증가율이 비교적 높은 품목을 기준으로 서민생활물가가 작성되었기 때문임.
 - 이런 문제점은 물가지수 작성에 있어서 구성품목의 가중치를 조정하지 않는 한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임.

<그림 14> 소비자물가, 생활물가(주거비 포함), 생활물가, 서민생활물가(주거비 포함), 서민생활물가의 추세



<표 10> 소비자물가, 생활물가(주거비 포함), 생활물가, 서민생활물가(주거비 포함), 서민생활물가의 추세와 전년동월 대비 증가율

연월	소비자 물가지수	증가율	생활물가 지수(주거 비 포함)	증가율	생활 물가 지수	증가율	서민생활 물가지수 (주거비 포함)	증가율	서민생활 물가지수	증가율
2003.01	92.5	3.8%	91.1	4.1%	89.7	4.0%	89.6	3.8%	87.6	3.6%
2003.02	93.0	3.9%	91.7	4.2%	90.4	4.2%	89.7	4.7%	87.7	4.8%
2003.03	94.1	4.5%	93.3	5.3%	92.3	5.5%	91.5	5.8%	89.9	6.2%
2003.04	93.9	3.7%	93.0	4.3%	91.8	4.3%	91.3	4.7%	89.5	4.9%
2003.05	93.8	3.2%	92.7	3.3%	91.3	3.1%	91.0	3.9%	89.1	3.9%
2003.06	93.5	3.0%	92.3	3.0%	90.9	3.1%	90.6	3.2%	88.5	3.0%
2003.07	93.4	3.2%	92.4	3.6%	90.9	3.7%	90.9	3.5%	88.8	3.5%
2003.08	93.9	3.0%	93.0	3.4%	91.5	3.5%	91.1	3.3%	89.0	3.3%
2003.09	94.7	3.3%	93.8	3.7%	92.5	3.8%	91.5	3.1%	89.5	3.0%
2003.10	94.8	3.7%	94.0	4.4%	92.7	4.8%	91.6	3.4%	89.5	3.5%
2003.11	94.6	3.4%	93.7	4.0%	92.3	4.2%	91.5	3.2%	89.5	3.3%
2003.12	95.1	3.4%	94.1	3.9%	92.7	4.2%	91.8	3.2%	89.8	3.3%
2004.01	95.6	3.4%	94.8	4.0%	93.6	4.3%	92.5	3.3%	90.5	3.4%
2004.02	96.1	3.3%	95.4	4.0%	94.2	4.2%	93.0	3.7%	91.2	3.9%
2004.03	97.0	3.1%	96.6	3.5%	95.8	3.8%	94.2	2.9%	92.7	3.0%
2004.04	97.0	3.3%	96.4	3.7%	95.5	4.1%	94.1	3.0%	92.5	3.3%
2004.05	96.9	3.3%	96.4	3.9%	95.4	4.6%	93.9	3.2%	92.3	3.6%
2004.06	96.9	3.6%	96.4	4.4%	95.4	4.9%	94.1	3.8%	92.5	4.5%
2004.07	97.5	4.4%	97.0	5.0%	96.2	5.8%	95.0	4.5%	93.6	5.4%
2004.08	98.4	4.8%	98.2	5.6%	97.7	6.7%	96.0	5.4%	94.8	6.5%
2004.09	98.4	3.9%	98.3	4.8%	97.8	5.7%	96.1	5.0%	95.0	6.1%
2004.10	98.4	3.8%	98.4	4.7%	97.9	5.6%	95.8	4.6%	94.6	5.7%
2004.11	97.8	3.3%	97.5	4.1%	96.9	5.0%	95.3	4.1%	94.0	5.1%
2004.12	97.9	3.0%	97.6	3.7%	96.9	4.5%	95.2	3.7%	93.9	4.6%
2005.01	98.9	3.4%	98.6	4.0%	98.3	5.1%	98.1	6.1%	97.6	7.8%
2005.02	99.3	3.4%	99.0	3.8%	98.8	4.9%	98.5	5.9%	98.0	7.5%
2005.03	99.9	3.0%	99.9	3.4%	99.9	4.3%	99.7	5.8%	99.6	7.4%
2005.04	100.0	3.1%	100.0	3.7%	100.0	4.7%	99.7	6.0%	99.6	7.7%
2005.05	99.9	3.1%	99.8	3.6%	99.8	4.6%	99.6	6.1%	99.5	7.8%
2005.06	99.6	2.8%	99.5	3.3%	99.4	4.2%	99.6	5.8%	99.5	7.6%
2005.07	100.0	2.6%	100.0	3.1%	100.0	4.0%	100.2	5.5%	100.2	7.1%
2005.08	100.3	2.0%	100.4	2.3%	100.4	2.8%	100.6	4.8%	100.8	6.2%

<표 10>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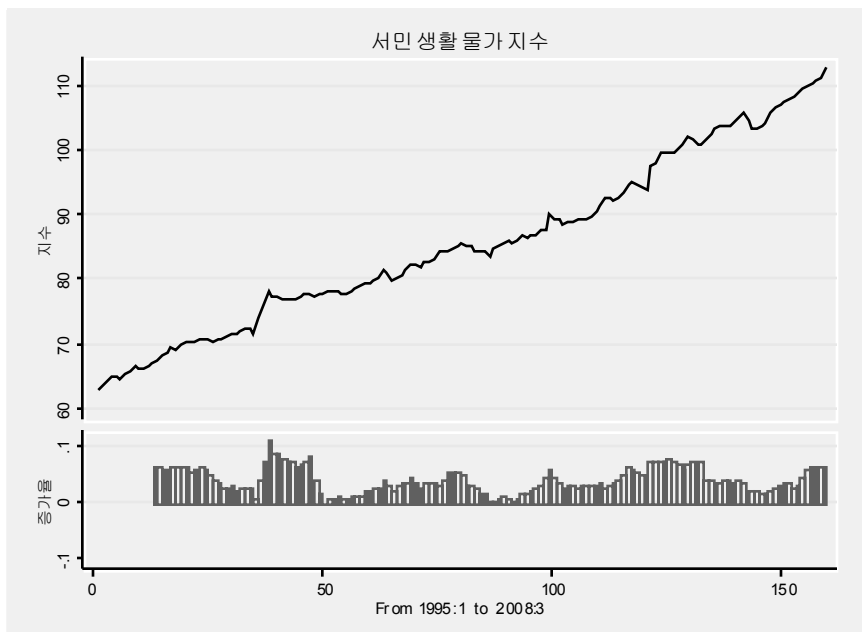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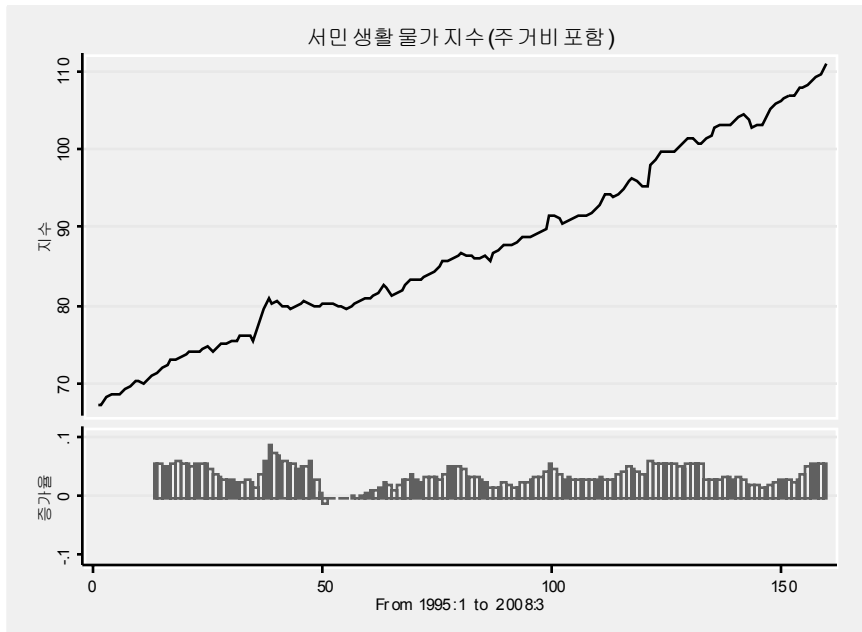
연월	소비자 물가지수	증가율	생활물가 지수 (주거비 포함)	증가율	생활 물가 지수	증가율	서민생활 물가지수 (주거비 포함)	증가율	서민생활 물가지수	증가율
2005.09	100.8	2.5%	101.0	2.7%	101.2	3.5%	101.4	5.5%	101.8	7.2%
2005.10	100.6	2.3%	100.9	2.5%	101.1	3.3%	101.3	5.8%	101.7	7.5%
2005.11	100.2	2.5%	100.3	2.9%	100.3	3.5%	100.6	5.6%	100.8	7.2%
2005.12	100.5	2.6%	100.6	3.1%	100.7	3.9%	100.7	5.8%	100.9	7.4%
2006.01	101.1	2.2%	101.4	2.8%	101.6	3.4%	101.4	3.4%	101.8	4.3%
2006.02	101.3	2.0%	101.6	2.6%	101.9	3.1%	101.8	3.4%	102.2	4.3%
2006.03	101.9	2.0%	102.3	2.4%	102.7	2.8%	102.7	3.1%	103.4	3.9%
2006.04	102.0	2.0%	102.5	2.5%	102.9	2.9%	102.9	3.2%	103.6	4.0%
2006.05	102.2	2.3%	102.5	2.7%	102.9	3.1%	103.0	3.4%	103.7	4.2%
2006.06	102.0	2.4%	102.4	2.9%	102.8	3.4%	103.0	3.5%	103.8	4.3%
2006.07	102.4	2.4%	102.8	2.8%	103.2	3.2%	103.4	3.2%	104.2	4.0%
2006.08	103.0	2.7%	103.6	3.2%	104.2	3.8%	104.0	3.4%	105.0	4.2%
2006.09	103.3	2.5%	104.1	3.1%	104.7	3.5%	104.5	3.1%	105.6	3.7%
2006.10	102.8	2.2%	103.3	2.4%	103.8	2.7%	103.7	2.3%	104.4	2.7%
2006.11	102.3	2.1%	102.6	2.3%	102.9	2.6%	102.7	2.1%	103.1	2.3%
2006.12	102.6	2.1%	103.0	2.4%	103.3	2.6%	102.9	2.2%	103.3	2.4%
2007.01	102.8	1.7%	103.2	1.8%	103.5	1.9%	103.1	1.7%	103.6	1.7%
2007.02	103.5	2.2%	103.9	2.3%	104.3	2.4%	103.7	1.9%	104.2	1.9%
2007.03	104.1	2.2%	104.7	2.3%	105.3	2.5%	104.9	2.2%	105.8	2.3%
2007.04	104.5	2.5%	105.3	2.7%	105.9	2.9%	105.7	2.7%	106.6	2.9%
2007.05	104.6	2.3%	105.5	2.9%	106.1	3.1%	106.1	3.0%	107.1	3.3%
2007.06	104.6	2.5%	105.5	3.0%	106.1	3.2%	106.4	3.3%	107.5	3.6%
2007.07	105.0	2.5%	106.0	3.1%	106.6	3.3%	106.8	3.3%	108.0	3.6%
2007.08	105.1	2.0%	106.0	2.3%	106.7	2.4%	106.9	2.7%	108.0	2.9%
2007.09	105.7	2.3%	106.8	2.6%	107.5	2.7%	107.6	3.0%	109.0	3.2%
2007.10	105.9	3.0%	107.1	3.7%	107.9	3.9%	108.0	4.2%	109.4	4.8%
2007.11	105.9	3.5%	107.1	4.4%	107.9	4.9%	108.3	5.5%	109.7	6.4%
2007.12	106.3	3.6%	107.6	4.5%	108.3	4.8%	108.7	5.6%	110.1	6.5%
2008.01	106.8	3.9%	107.9	4.6%	108.8	5.1%	109.1	5.8%	110.6	6.8%
2008.02	107.2	3.6%	108.3	4.2%	109.1	4.6%	109.4	5.6%	111.0	6.5%
2008.03	108.2	3.9%	109.5	4.6%	110.5	4.9%	111.0	5.8%	112.9	6.7%

주: 서민생활물가지수(주거비 포함) 및 서민생활물가지수는 관리대상 52개 품목에 속한 총 72개 소비자물가지수 작성 품목의 개별 물가지수와 그 가중치를 이용하여 연구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정부의 공식통계가 아님.

<표 11> 소비자물가, 생활물가(주거비 포함), 생활물가, 서민생활물가(주거비 포함), 서민생활물가 원계열 간, 전년동월 대비 증가율 간 상관계수

		소비자	생활물가	생활물가	서민생활	서민생활
		물가지수	지수 (주거비 포함)	지수	물가지수 (주거비 포함)	물가지수
원계열	소비자물가지수	1.000				
	생활물가지수 (주거비 포함)	1.000	1.000			
	생활물가지수	0.999	0.999	1.000		
	서민생활물가지수 (주거비 포함)	0.991	0.991	0.990	1.000	
	서민생활 물가지수	0.990	0.990	0.990	0.999	1.000
증가율	소비자물가지수	1.000				
	생활물가지수 (주거비 포함)	0.989	1.000			
	생활물가지수	0.949	0.970	1.000		
	서민생활물가지수 (주거비 포함)	0.768	0.743	0.703	1.000	
	서민생활 물가지수	0.695	0.682	0.722	0.944	1.000

<그림 15> 서민생활물가지수와 전년동월 대비 증가율 추이
 (1995년 1월~2008년 3월)



(4) 예상되는 정책적 부작용

□ 거시정책과의 부조화

-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품목별로 물가를 관리하는 미시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금리, 통화, 재정정책이 보완적으로 추진될 필요성이 있음.
- 하지만 정책집행기관의 효율적 공조체제 구축이 힘들고, 국가정책상 경제성장을 위한 재정책대의 유인이 항상 존재하는 상태에서 물가안정을 위한 거시정책과 미시정책이 상충되어 효율적 물가관리가 힘들어질 가능성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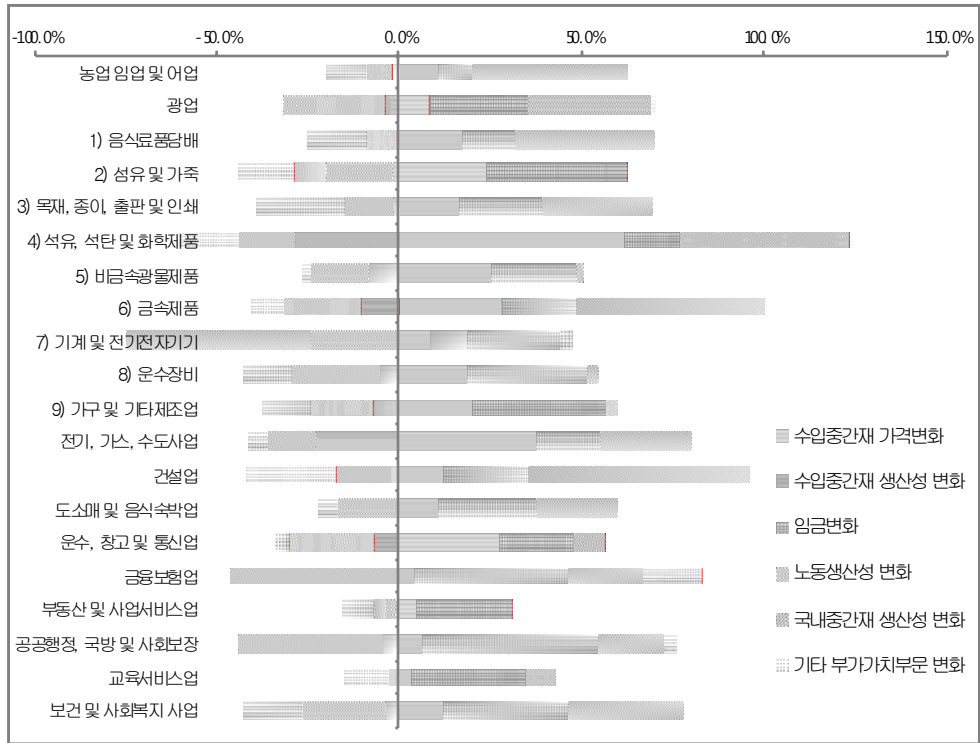
□ 일자리 창출기회 감소로 인한 서민생활 불안

- 물가안정과 경제성장은 모두 중요한 정책목표이므로 정책의 선택, 정책수행의 강도에 있어서 적절한 균형감각을 가질 필요성이 있음.
- 물가안정을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오히려 성장을 억제하여 일자리 창출기회가 감소된다면 이는 오히려 서민생활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
- 최악의 경우, 물가안정과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기회를 모두 상실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양극화 심화

- 관리대상 품목과 관련된 기업들은 다수 대기업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최종 유통단계의 기업들은 주로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지나친 물가관리로 인한 피해는 중소기업에 귀착되어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할 우려가 있음.
- 대부분 관리대상 품목들은 실제 기술혁신이 크게 기대되지 않는 분야로 외부요인에 대한 자체흡수능력이 부족한 분야로 평가됨.
- 다음 <그림 16>에 의하면 농림, 어업, 수산업, 음식료업 등에서는 수입가격 상승을 생산성 증가를 통해 흡수하는 능력이 부족한 실정임.

<그림 16> 물가변화의 요인별 분해결과 추정치(1990~2005년)



주: 1) 1990~2005년 2기간의 가격변화는 藤川清史(2005)에 따라 다음 식에 의해 분해됨.

$$\begin{aligned}
 p_2^d - p_1^d &= [(p_2^m A_2^m + w_2 L_2 + O_2) B_2] - [(p_1^m A_1^m + w_1 L_1 + Q) B_1] \\
 &= (p_2^m - p_1^m)(A_1^m B_1 + A_1^m B_1)/2 <수입 중간재 투입에 의한 가격변화> \\
 &\quad + (p_2^m + p_1^m)(A_2^m - A_1^m)(B_1 + B_2)/4 <수입 중간재 투입에 의한 생산성 변화> \\
 &\quad + (w_2 - w_1)(L_2 B_2 + L_1 B_1)/2 <임금변화> \\
 &\quad + (W_2 + W_1)(L_2 - L_1)(B_2 + B_1)/4 <노동생산성 변화> \\
 &\quad + [(p_2^m + p_1^m)(A_2^m + A_1^m) + (w_2 + w_1)(L_2 + L_1) + 2(L_2 + L_1)](B_2 - B_1)/4 \\
 &\quad <국내 중간재 투입의 생산성 변화> \\
 &\quad + (O_2 - O_1)(B_2 + B_1)/2 <비용자보수 외 다른 부가가치요인의 변화>
 \end{aligned}$$

여기서 p^d : 산업별 국내가격 벡터, p^m : 산업별 수입가격 벡터, A^m : 수입 중간재 투입계수 행렬, L : 노동 투입계수 (대각행렬), w : 임금벡터, O : 비용자보수 외 다른 부가가치요인, $B = (I - A^d)^{-1}$: 레온티에프 역행렬, A^d : 국내 중간재 투입계수 행렬을 나타냄.

2) 2005년 산업연관표는 2003년 산업연관표의 투입계수, 중간소비비중을 이용하

여 RAS방법을 통해 추정한 자료를 활용함.

□ 실질적인 규제로 작용하여 다른 부작용 발생

- 제품의 질 저하, 조사대상에 제외되는 유사 대체품의 가격상승이 우려됨.
- 실제 물가관리가 엄격하게 이루어질 경우, 직접 조사대상이 되는 업계에서는 외부적인 원가상승요인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다른 적절한 대안이 없을 것으로 평가됨.

V. 물가안정을 위한 대책

1. 관리대상 품목의 축소

- 실제 서민생활물가를 크게 증가시키는 품목은 유류(휘발유, 경유 등), 납입금, 주거비, 교통비이므로 이들 일부품목의 물가관리에 주력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는 가능한 한 지나친 시장개입을 방지하고 효과적인 서민물가상승을 막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임.
 - 이를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유류에 대한 관세인하, 유통구조 개선, 시장경쟁 촉진 등 간접적 물가관리정책을 더욱 강조할 필요가 있음.

2. 거시정책과의 조화

- 통화정책, 재정정책과 적절한 조화를 이루는 미시적 물가대책을 구사할 필요가 있음.
 - 정부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인위적 경제성장의 경우 물가상승압력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으므로 원유, 원자재, 곡물 수입가격 상승에 따른 국내 물가상승을 더욱 가중할 위험성이 있음.
 - 경제성장과 물가안정의 우선순위는 단기적으로는 미세조정을 통한 물가안정, 중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에 우선을 두어야 할 것임.
- 아울러 물가상승억제를 위한 성장정책의 완화는 성장둔화에 따른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상실하여 서민생활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임.
- 따라서 물가안정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가능하게 하는 정책믹스(policy mix)가 절대적으로 필요함.

3. 탄력적 조세운용

- 최근 생활물가의 급등은 국제원유가 상승에 따른 유류가 상승에 크게 초래되고 있으며, 이런 외부적 요인에 대해 업계의 획기적인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는 정부의 탄력적인 조세운용이 매우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 탄력적 조세운용은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대안으로 고려될 수 있고, 시장개입을 최소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음.
 - 정부 역시 물가안정을 위해 밀·옥수수 등 가공용·사료용 원료로 사용되는 물품에 대한 무관세화, 휘발유 등 석유제품에 대한 할당관세(3%) 인하를 추진하고 있으나 물가안정 효과는 크지 않을 것임.
 - 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탄력적 운용을 통한 유류가격의 안정이 매우 필요한 시점임.

4. 교육비 상승 억제

- 현재 서민생활을 어렵게 하는 물가상승요인 가운데에는 환율, 원유가, 곡물 가격 상승과 큰 관련성이 적은 집세, 교육비의 상승으로 인한 생활물가 상승이 현저함.
- 지난 1년간 납입금 상승률은 휘발유, 경유 다음으로 서민생활물가를 상승시킨 요인으로 작용했는데 특히 대학등록금 상승이 납입금 상승의 커다란 원인이 되고 있음.
 - 대학등록금 상승은 지난 1년간의 추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2000년대에 들어와서 지속적으로 생활물가상승에 크게 기여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음.

5. 유통과정 개선

- 배추, 무 등 채소류는 일반적으로 공급의 비탄력성, 가격의 불안정성, 계절성, 지역성을 가지고 있어서 가격안정이 매우 중요하나 오랫동안 효과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지유통 또는 소비지 유통과정의 합리화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음.
 - 정부는 농산물 가격급등에 대응하여 할당관세 인하, 비축물자 방출을 확대하고 유통구조 개선 등 근본적인 대응을 마련하고자 함.
- 유류 역시 독과점체제하에서 유통과정에 문제점이 많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 정부는 석유제품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대형할인점의 유통시장참여, 유통시장 위주 가격결정체제 확립, 주유소 복수상표제 활성화 등을 추진하기로 함.

6. 상품경쟁력 강화 차원의 접근

- 생산원가절감, 기술혁신을 통해 비용증가요인을 극복하는 방법이 최선이 될 것임.
 - 과거 한국 제조업의 경우 수입원자재의 가격변화에 비교적 활발한 생산성 증가를 통해 대응해 온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그림 15> 참조).
- 하지만 이번 서민물가관리대상 품목의 경우 농산물, 정유, 음식료 등 업종의 성격상 기술혁신이 활발하지 못한 분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생산성 증가는 크게 기대할 수 없을 것임.

7. 해외자원의 활용

- 세계 5위의 원유수입국이자 세계 7위의 에너지 소비국인 우리나라는 2007년 에너지 자주율이 3.8% 수준에 불과해 필요한 에너지의 96% 이상을 외국기업에게서 수입해 오고 있음.
- 안정적 에너지 확보를 위해 해외자원 개발을 통한 자주개발률을 크게 제고할 필요가 있음(프랑스의 자주율이 90% 이상, 이탈리아는 50% 이상).

- 금년 지식경제부는 석유·가스 등 자원의 자주개발률을 올해 목표 5.7%에서 향후 5년간 획기적으로 늘려 18% 수준까지 높이기로 함.
- 식량, 에너지는 안보적 차원에서 정부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함.
 - 이를 위해 원유, 원자재, 전략품목, 농업부문 등에서 적극적인 M&A를 통해 전략적인 원자재 확보가 필요함.
 - 정부의 넘치는 외환보유고를 국부펀드로 운영하거나 각종 연기금을 활용하여 해외 원자재의 확보를 위한 노력을 전략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참고문헌

- 기획재정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생활필수품 점검 및 대응계획」, 2008. 3. 25.
- 대한상공회의소,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업계애로 실태조사」, 2008. 4.
- 삼성경제연구소, 「유가 급등의 원인과 향후 전망」, 2007. 12.
- 한국은행, 『2003년 산업연관표』, 2007.
- _____, 『산업연관분석해설』, 1987.
- 현대경제연구원, 「휘발유 가격 안정, 교통세 인하로 충분한가」, 2008.
- 통계청(www.kosis.kr)
- 한국은행(ecos.bok.or.kr)